

동 책자에 실린 내용은 통일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독일 통일 20년 계기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1.5 통일비용과 재정정책

통 일 부

CONTENTS

제 1 부

통일비용과 재정정책 / 알렉산더 피셔(Alexander Fisher) · 427

1. 개요 · 428
 2. 독일 통일 “비용” · 435
 3. 왜 서독에서 동독으로 상당한 이전지출이 필요한가? · 437
 4. 통일 이후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지출이 필요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초반 추산 내용 · 439
 5. 모든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 444
 6. 1990-1995 독일연방정부의 재정 전략 · 449
 7. 독일 통일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한 국가 부채 확대 · 449
 8. 통일 재원을 위한 세금, 수수료, 사회보장분담금 및 기타 분담금 인상 · 455
 9. 긴축정책, 예산 재편,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 461
 10. 독일 통일로 얻은 손실과 이익 · 462
 11. 결론 · 467
- 약어색인 · 471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 477

- 자료 1 통일의 경제적 비용 · 478
- 자료 2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에 관한 개요와 이러한 이전 지출이 경제 발전과 각 주정부 재정 및 지역자치단체 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 480
- 자료 3 이전 지출의 성과 - 구동독지역 재건 지원과 발전 제약 · 482
- 자료 4 독일의 국내총생산, 소비 및 직업 활동 (1970-2000) · 484
- 자료 5 공공 재정의 재정 수요와 공공 부채 · 485
- 자료 6 독일 통일에 관한 국민경제 관점 · 488
- 자료 7 제 2차 발전 보고서: 구동독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경제연구소 보고 (2003.11) · 490
- 자료 8 독일 통일 - 이전 지출의 문제 · 492
- 자료 9 화폐 전환 이후 독일에서의 화폐 · 494
- 자료 10 재정 정책상의 조치 및 통합 과정-독일 통일 5년에 대한 회고 · 496
- 자료 11 독일 통일의 자원 마련 · 497
- 자료 12 신연방주에 대한 발전지원 · 498
- 자료 13 통일의 비용은 얼마인가? 구동독지역에 대한 이전 지출 성과에 대한 평가 · 499
- 자료 14 10개항 프로그램 · 500
- 자료 15 구동독지역에서 국가 경제 및 기업적 차원에서의 적응단계 진행(요약집) · 502
- 자료 16 재정 정책과 통일 - 10년의 결산 · 503
- 자료 17 공동 경제-화폐 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사항 · 505
- 자료 18 지역 간 협력의 지원/보조를 위한 양독 간 공동위의 설립과 업무지침에 관한 협의 · 506
- 자료 19 구동독의 경제 상황에 관하여 · 507

제 1 부

통일비용과 재정정책

알렉산더 피셔(Alexander Fisher)¹

1. 개요	428
2. 독일 통일 “비용”	435
3. 왜 서독에서 동독으로 상당한 이전지출이 필요한가?	437
4. 통일 이후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지출이 필요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초반 추산 내용	439
5. 모든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444
6. 1990-1995 독일연방정부의 재정 전략	449
7. 독일 통일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한 국가 부채 확대	449
8. 통일 재원을 위한 세금, 수수료, 사회보장분담금 및 기타 분담금 인상	455
9. 긴축정책, 예산 재편,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461
10. 독일 통일로 얻은 손실과 이익	462
11. 결론	467

¹ 알렉산더 피셔 박사는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의 국장을 역임했다. 알렉산더 피셔 박사의 연락처는 alexfisher@gmx.de이다.

1. 개요

독일통일은 세계 제2차 대전 이래 세계 최대의 경제 프로젝트이자 정치적 사건이었다.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양 독일을 위한 통일 조약(the Unification Treaty)²과 소위 “국가 조약(State Treaty)”³ 이라고 부르는 조약에 대해 서독 및 동독 의회의 동의와 비준을 거쳐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동독으로의 이전지출은 이전부터 실시되었지만 1990년 늦봄에는 이전지출이 멈추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전지출의 여부는 화폐, 경제, 사회 분야의 공식적 통합이 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소위 화폐·경제·사회 통합(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WWU)이라고 불리는 조약의 내용이 통일의 모든 경제적, 재정적 부분의 주요 핵심이었다.

서독 정부는 새로 선출된 동독정부⁴에 화폐·경제·사회 통합 없이는 동독에 막대한 이전지출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950-2000년의 동독 GDP 증가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 1에서 볼 수 있듯 1990년 상반기 동안 경제적 압박은 높아져 갔다.

동독(DDR)의 엘리트 정치인들은 1990년 3월 18일 실시된 첫 자유선거에서 권력을 잃었다. 이러한 사실은 동독의 정치 지도자들이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찬성하는 표를 던지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새로 설립된 의회(자유선거로 선출된 동독의 마지막 의회)의 67명의 의원들은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반대표를 던졌다.

화폐·경제·사회 통합을 받아들이고, 1990년 8월 통일 조약에 서명하면서, 동독 사회의 재건을 위한 대규모 이전지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1989년 말 동독의 인구수는 1,660만 명으로 서독 6,270만 명의 26.5%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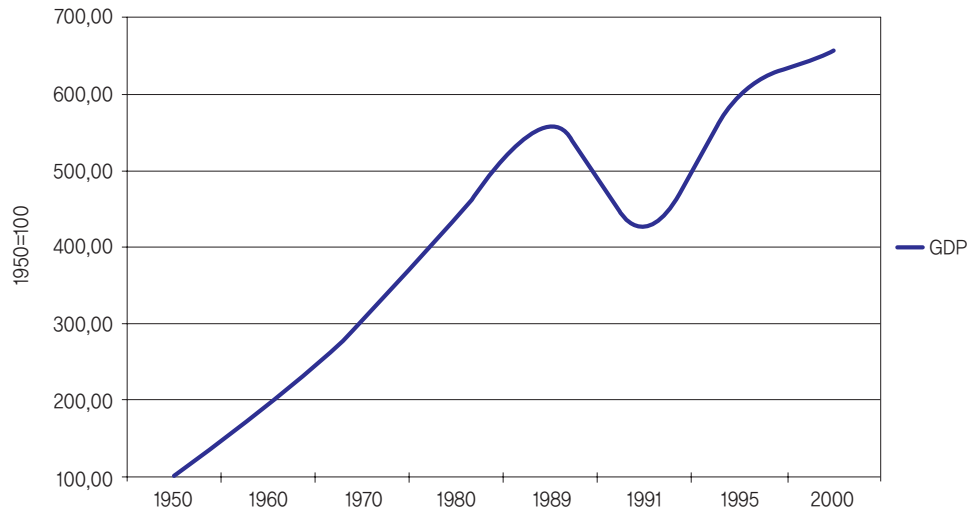
동독화폐인 “동독 마르크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 생산력과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동독 근로자의 임금이 어느 수준이 되어야 서독과 균형이 맞을지 측정하고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989년 말 동독 내부의 계산에 의하면 비율은 1:4.7이

2 통일 조약(Einigungsvertrag)은 1990년 8월 31일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서독 내무장관과 귄터 크라우스(Günther Krause) 동독 국무장관이 동독에 위치한 황태자궁(Kronprinzenpalais)에서 서명하였다.

3 독일어로는 “Staatsvertrag”이라 칭함.

4 기독교민주연합당(CDU, 기민련) 그리고 사회민주당(SPD, 사민당) 등 간의 동독 대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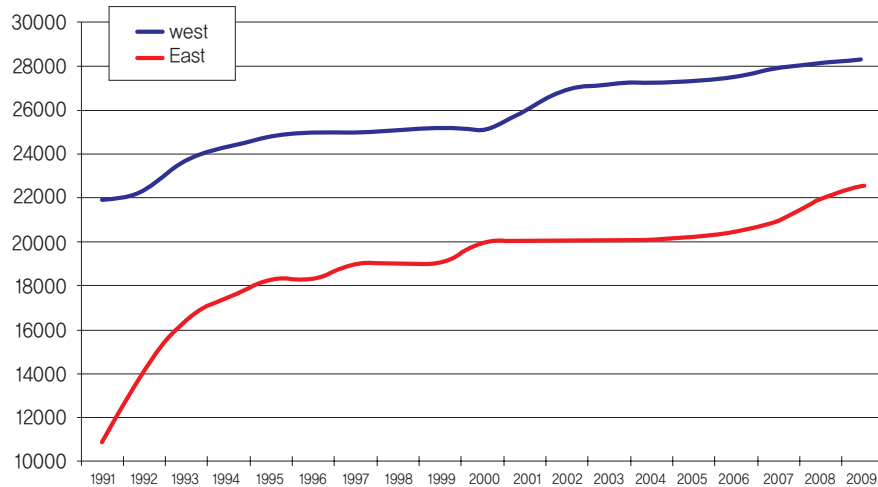
그래프 1 | 1950-2000년 신연방 주의 GDP 발전상황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Office of National Account Germany)

었다. 하지만 이후에 발견된 통계자료에서는 동독의 생산품을 국제 시장에서 거래할 때, 23 서독 마르크를 받으려면 100 동독 마르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성에 비해 월급과 임금에 대한 1:1의 화폐통합이 얼마나 급진적인 생각이었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준다. 균형이 맞으려면 비율은 적어도 1:4.4는 돼야 했다. 암시장의 비율은 1:8, 심지어 1:10까지 했다. 이러한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가 바로 동독 경제가 붕괴된 이유였다(동독과 서독의 근로자당 연평균 월급과 임금의 상승치는 아래 그래프 2를, 동독과 서독의 1인당 GDP 비율은 그래프 3을 참조하라).

그래프 2 | 근로자당 연평균 임금과 월급(유로) - 서독, 동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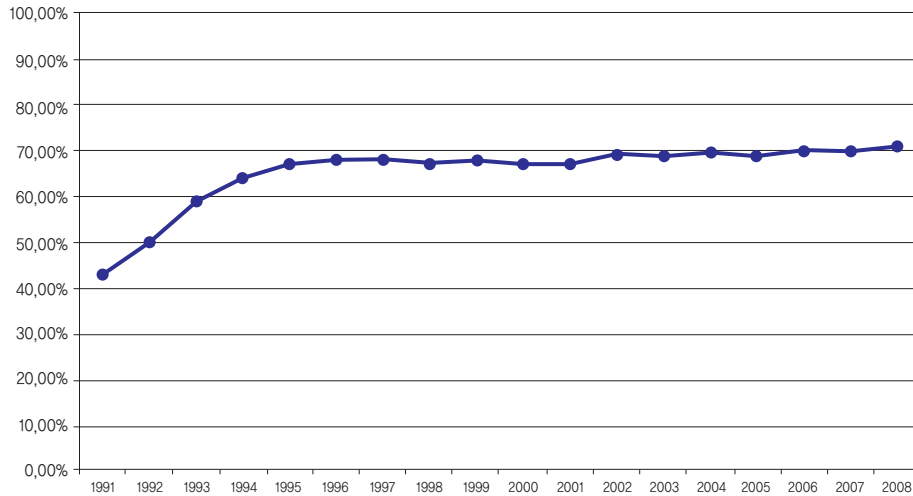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Federal Office of National Account Germany)

따라서 통일에 필요할 것이라 추산한 금액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1990년 화폐 · 경제 · 사회 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예로, 당시 서독의 야당 지도자였던) 사민당(the Social Democratic Party) 당대표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은 동독을 재건하는데 1,000억 유로(약 150조 원)가 들 것으로 추정했고, 이는 정당과 특히 독일 납세자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와 그의 추종세력⁵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했다.

그 당시 라퐁텐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통일은 점진적으로, 경제적 조정 및 사회 통

5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전 독일 총리는 “원래 하나였던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누구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Jetzt wächst zusammen, was zusammen gehört und wir müssen aufpassen, daß niemand unter die Räder gerät”) 브란트 총리의 정치적 반대세력은 그의 깊은 생각이 담긴 이 진술을 악용해 유권자가 브란트 총리가 통일에 반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그래프 3 | 1991-2008년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1인당 GDP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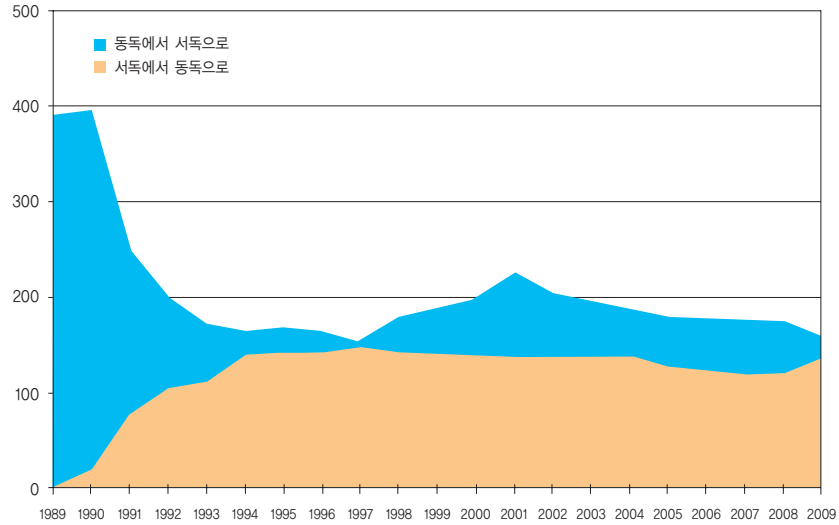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합은 좀 더 느린 속도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를 담은 계획은 1:1 비율로 화폐통합이 발효된 1990년 7월 1일, 헬무트 콜(Helmut Kohl) 전 독일 총리가 서독 의회에서 전설적인 연설을 하면서 묻혀버렸다. 콜 총리는 동독이 곧 번영하게 될 것이라 약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정부가 통일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선언했다. 돌이켜보면, 1990년 여름은 서독이 동독에게 대의민주제에서 표를 얻기 위한 약속이 넘쳐났던 여름이었다. 헬무트 콜 총리가 이끌던 서독정부는 콜 총리 자신이 임기로 있는 동안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1:1 비율의 화폐통합을 약속한 것은 독일중앙은행(Deutsche Bundesbank), 독일 정부에 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언을 하는 기구인 독일 경제자문위원회(Sachverständigenrat zur Beurteil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Lage der Bundesregierung in Deutschland)를 비롯한 각자의 경제적 이론과 논리를 가진 대학의 경제학자들과 독일경제연구소(DIW)와

그래프 4 | 1989-2009년 독일 내 이주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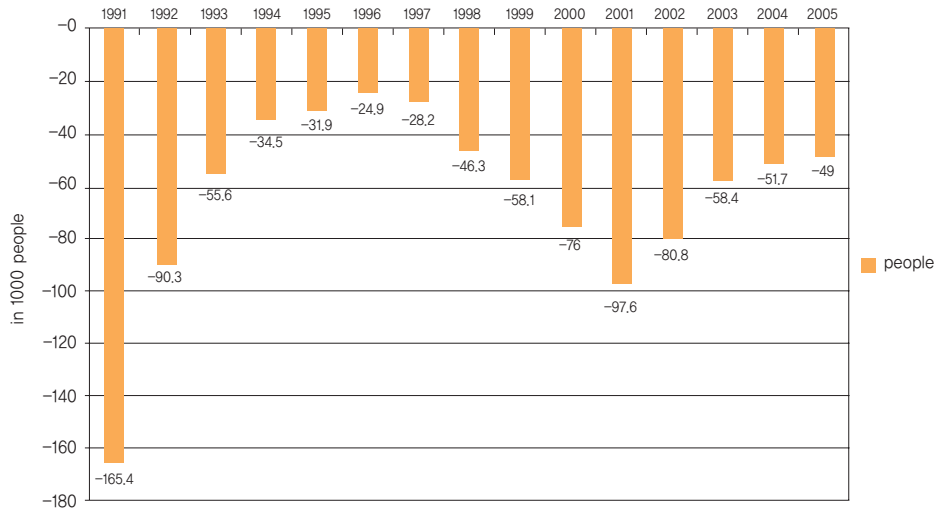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같은 독일의 싱크탱크 등 여러 분야에서 터져 나온 경제적 조언과는 상충되는 결정이었다. 1:1 화폐통합을 통해 동독에서 서독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의 주요부분이 중단되었다고 할지라도, 동독은 특히 젊은 세대의 주요한 부분을 서독에 잃었다. 1989년부터 2009년까지 일어난 독일 내 이주 현황에 대해서는 위의 그래프 4, 5를 참조하라.

20년이 지난 오늘 분명한 사실은 1990년에 정부가 약속한 내용 중 일부분만이 지켜졌다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20년 전과 비교해 훨씬 발전했고, 동독인은 통일 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지역 예산을 담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세금을 전혀 올리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부채를 통해서(동독 경제가 경쟁력을 갖췄을 때 빚을 상환하고, 독일 전체 예산에 세수를 올림으로써) 통일에 필요한 자금을

그래프 5 | 1991-2005년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간 이주현황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여전히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로 있다. 특히 2008/09년 경제위기를 겪고 난 후에는, 자본을 자체 조달하고 통일로 얻은 수익에서 부채를 갚는다는 이상적인 생각은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독일 통일을 위한 국가 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했고, 주요 연방예산에서 조달한 공채는 다양한 형태의 제2차 그림자 예산으로 투입되어 그동안 늘어난 부채가 얼마인지 거의 추산하기 불가능할 정도였다. 동시에 GDP 대비 부채 비율 때문에 금리는 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채무원리금 상환액의 증가를 가져왔다.

통일 비용을 묻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다. ‘비용’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통일의 경제적 비용은 종종 동독에 대한 공공 지출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통일 비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통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값비

싼 일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이하 “독일 통일 비용” 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또한 통일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세세히 검토 할 것이다. 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부터 논의해보면, 정부가 매년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만약 통일 과정 초반에는 대출만으로 그리고 소위 독일 통일 기금(Fonds Deutsche Einheit)이라고 불리는 자금으로 통일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곧 이것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동독의 퇴락한 산업으로, 동독 주민 개개인의 호주머니로, 그리고 동독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가능한 한 빨리 자금을 보내야했던 기관들은 다양한 대출 수단을 만들어냈다. 또한 1990년대 초 그러한 대출 수단이 만들어지던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세금 개혁이나 변화가 있었고, 각 정부는 매년 시기가 되면 세금인상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통일 비용과 조달에 대한 2, 3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몇 십억, 심지어 몇 조 유로가 통일비용을 조달하는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통일 독일의 8,020만 국민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혹은 영국 등의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의 국민들보다 훨씬 부유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90년대에 터져 나온 행복한 비명과 함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통일 이후 새로운 황금기를 꿈꾸고 기대하게 만드는 환희의 표현인 “번영의 환경”이라는 말 등에 대해서 잘 판단했어야 했던 것 같다. 위에 언급한 통일 조약(Einigungsvertrag)에는 우리가 잘 판단했어야 했다는 몇몇 증거가 들어있다. 조약에는 독일 민영화를 담당하는 독일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⁶ 혹은 줄여서 “Treuhand”)의 모든 “소득”은 동독으로 전달해 동독 내에서 지난 40년간 동독주민들이 쌓아온 것을 되돌려주자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영화 작업 초기에 예상된 수익은 대략 6,000억 독일 마르크⁷였다. 대규모의 민영화 작업이 마무리 될 무렵 민영화 담당 기관인 독일 신탁관리청은 2,040억 서독 마르크⁸의 적자로 회계장부를 마감했는데, 이는 동독 사회주의 기업과 공기업의 회계장부에

6 동독 국영 부동산의 사유화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 기관

7 독일 마르크를 유로와 1:1.96의 비율로 교체했고, 단순화해서 비교해보았을 때 6,000 독일 마르크는 약 3,000억 유로(약 444조 원), 정확히는 3,060억(약 450조 원) 유로이다.

8 약 1,040억 유로(약 152조 원)

익숙한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2. 독일 통일 “비용”

통일 및 국가조약을 기반으로 과거 동독(독일민주공화국)에 속하던 6개 지방 및 주 정부기관⁹이 서독(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법 틀 안으로 합병이 된 후, 동독지역은 독일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정 이전을 신청했다. 이러한 재정 이전은 더 발전된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 생활수준을 갖는 지역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독일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이렇게 부를 재분배하는 개념은 “생활 수준의 평등함”¹⁰이라고 불린다. 이는 1990년 10월 3일부터 독일의 더 부유한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으로 대규모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동독 지역은 통일 이후 수년간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고, 대부분의 지역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빈곤한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동독지역의 주를 독일 재정헌법에 귀속시킴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동독의 독일 재정 헌법으로의 귀속을 위한 법적 근거”의 5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아래 그래프 6은 소위 “균등한 재정 정책”¹¹을 통해 정당화된, 동독으로 이전된 유로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 사회의 이런 생각과 헌법은 서독 시민이 동독으로 상당한 액수의 이전과 투자를 하도록 만든 기반이 되었다. 본 장에서는 비용과 동독 지방행정기관과 사회보장기관에 이전된 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행정적 방법으로 자금이 조달이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아래 “독일 통일의 재정”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¹² 헌법 23조에 따라 1990년 10월 3일 동독을 서독의 재정 헌법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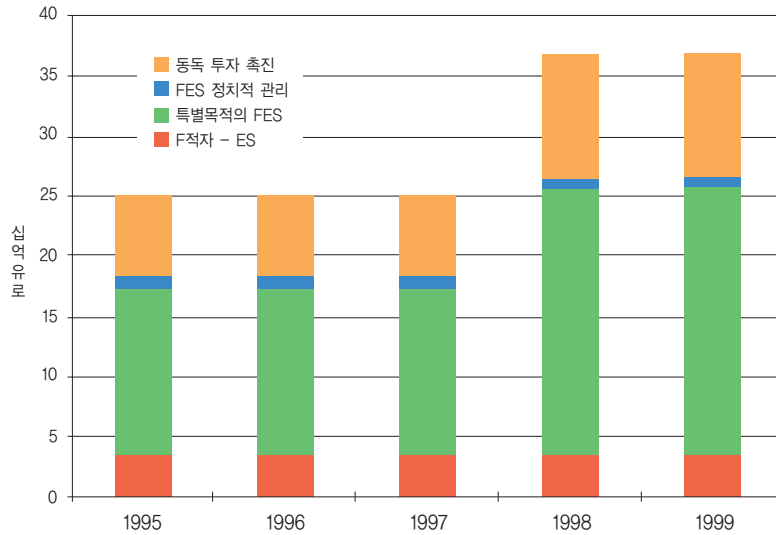
9 해당 주정부는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Anhalt, Sachsen, Berlin-Ost and Thüringen이다.

10 “Gleichwertigkeit der Lebensverhältnisse”

11 Länderfinanzausgleich

12 FRG =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 서독이라고 불렸던 영토

그래프 6 | 1995-1999년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재정균등화정책(FES)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로 흡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왜 서독인들은 동독으로의 막대한 이전지출을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는지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1990년~1994년 까지는 독일 통일기금을 통해 동독의 재정을 지원하였고 1995년부터 재정헌법에 통합되었다. 역주). 동독인은 통일 전 수년간 형편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해왔고 이는 동독의 붕괴를 초래했다. 아래 표1은 동독인이 통일이 되기 전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형편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정권이 90년대 초까지 구소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사용한 상황과도 비슷하고, 그 이후로도 자신들이 실제 살고 있는 상황보다 더 부유하는 것을 과시하려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표 1 | 신연방주 및 지방정부의 수입 및 지출

일인당 독일 마르크

	주정부			지방정부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세금 등	1117	1571	1692	152	276	357
기타 수입	159	310	359	338	696	813
총수입	1276	1881	2051	490	972	1170
지출	5399	5852	6374	2991	3915	4065
격차	4123	3971	4323	2501	2943	2895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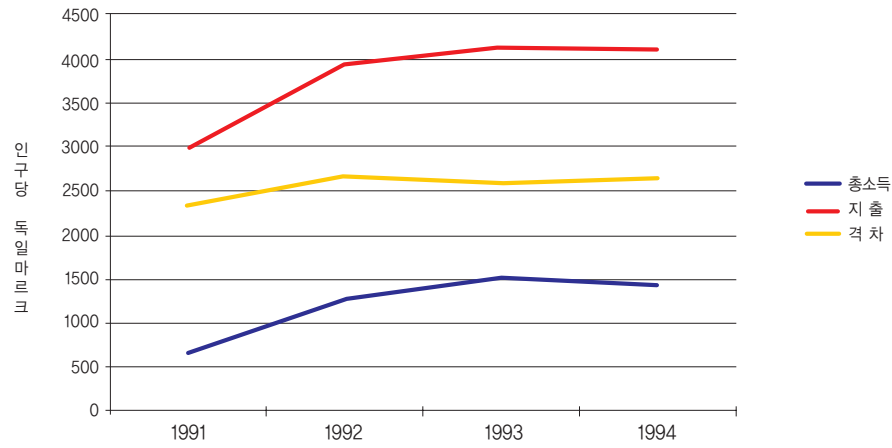
3. 왜 서독에서 동독으로 상당한 이전지출이 필요한가?

그래프 7과 8은 신연방주와 지방정부의 일인당 지출이 일인당 소득을 명백히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격차로 외부의 재원조달이나 너그러운 후원자로부터 일종의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독 납세자, 금리가 빠르게 인상하고 있었던 국제 금융시장, 그리고 다양한 부흥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가 너그러운 후원자가 되었다. 이 내용은 “독일 통일 자금조달”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통일 첫해에 신연방주와 지방정부의 지출과 수입은 막대한 격차를 보였는데, 주정부의 경우 격차가 일인당 약 4,000 독일마르크/2,000유로(약 300만 원)로 총 연간 600억 독일 마르크/300억 유로(약 45조 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격차는 2,600 독일마르크/1,300유로(약 190만 원)로 총 연간 390억 독일마르크/145억 유로(약 22조 원)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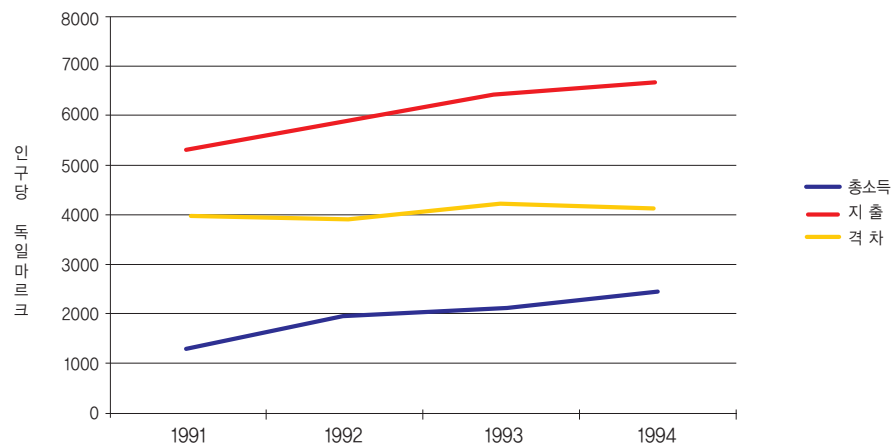
아래 그래프 9는 2000년도의 신연방주와 지방정부의 지출과 수입의 총 격차를 보여준다. 격차는 1994년 일인당 6,600 독일마르크/3,300 유로(약 5백만 원)에서 3,800 독일마르크/1,900 유로(약 280만 원)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금액으로, 이렇게는 절대 지속가능할 수 없다. 아래 그래프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연방주의 지출과 수입의 격차는 2000년에만도 여전히 막대한 수준인 일인당 3,830독일 마르크를 기록했다.

그래프 7 | 1991-1994년 신연방주 내 지방정부의 소득과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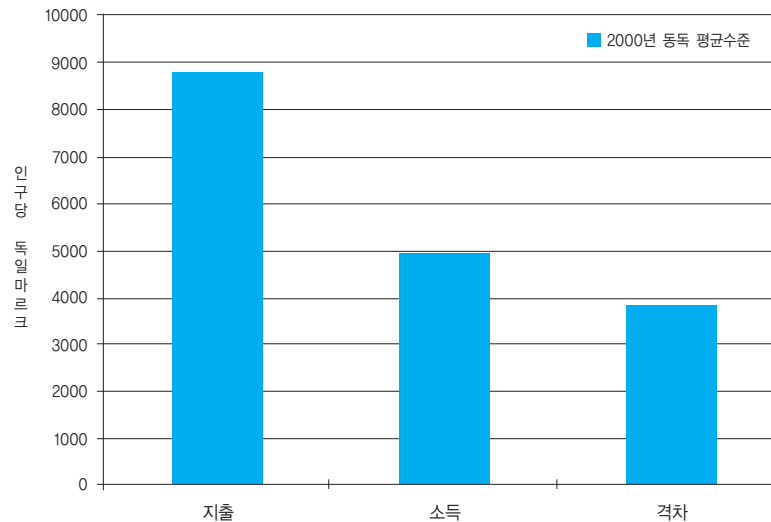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그래프 8 |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그래프 9 | 2000년 신연방주와 지방정부의 지출과 수입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4. 통일 이후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지출이 필요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초반 추산 내용

1990년 봄부터 초여름까지, 모든 경제 기관에서는 화폐 · 경제 · 사회 통합이 구동독 지역에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해 상충된 의견을 내놓았다. 독일연방정부가 1949년 화폐 개혁 이후 경험한 것과 유사한 ‘제2의 독일 신화’에 대한 기대부터 신연방주 지역에서 실업자가 수백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다양한 예측이 쏟아져 나왔다.

독일경제연구소(DIW)¹³는 여러 경제 연구소 중 처음으로 동독의 경제발전에 대한 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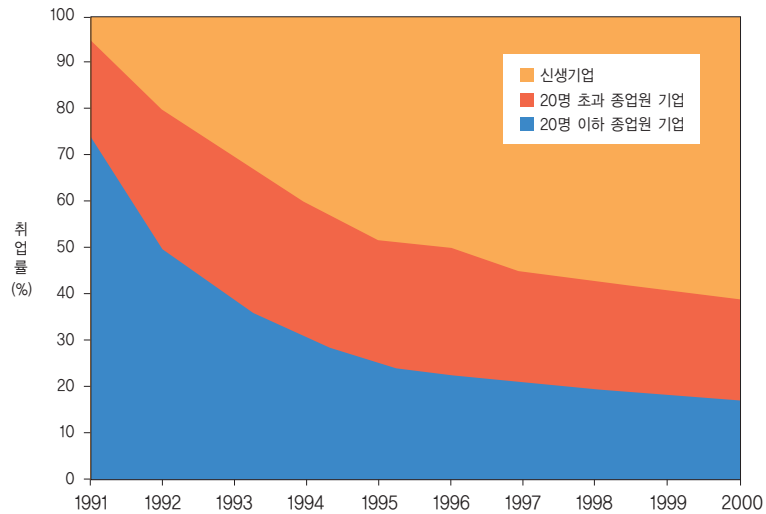
13 DIW = 독일경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베를린

예측을 실시했다. 독일경제연구소는 임금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추세를 보았을 때 생산량이 급감하지도 않을 것이고, 실업자 수는 최대 백만 정도만 될 것으로 보아 동독 경제가 독일 화폐·경제·사회 통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중기적으로 필요할 이전지출 금액을 연간 500억 마르크/250억 유로(약 37조 원)로 추정했다. 1990년 4월 초 독일의 다섯 개 유력 경제연구소가 공동분석을 실시했을 때에도 초기 재정분담금액과 인프라 건설 비용은 150-200억 마르크/80-100억 유로(약 12조-15조 원)면 충분할 것¹⁴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런 비용은 동독의 새로운 시장 덕에 서독의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늘어나, 그 비용을 대부분 세수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비롯하여 많은 예측이 경제 모델과 예측 면에서 너무나 낙관적이고 잘못된 추산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었다.

비록 보고서에서는 동독 기업의 경쟁적 입지를 유지하도록 임금을 계속 낮게 책정하거나 적어도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지만 중기적으로 세금인상을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주된 문제점은, 생산성의 차이를 감안한 생산성에 따른 거시경제적 임금수준은 1:1로 화폐교환 이후에는 불충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에서 동독의 용역과 제품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당시 모든 서독 경제연구소와 정부기관은 국제경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다. 동독의 생산구조는 대부분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정치구조를 가진 국가의 생산구조였고, 오늘날 북한의 생산구조와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독은 내부적 지향의 결과로 훨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했지만, 북한은 생산량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국가가 국제적 시장의 경쟁 압력에 한꺼번에 노출이 된다면, 그 국가는 반드시 생산구조를 근본부터 변화시켜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만들기까지는 그 특성상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아래 그래프 10의 취업 비율을 보면 1991년 구동독기업 근로자의 거의 100%가 취업되었던 것이 2000년 신생기업에는 60%가 취업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¹⁴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e Lage der Weltwirtschaft und der deutschen Wirtschaft im Frühjahr 1990, in: Wochenbericht of DIW, No. 15/1990.

그래프 10 | 1991년-2000년 동독지역의 기존 기업과 신생기업에서 취업률(%)



출처: 독일연방노동청(German Federal Labor Agency)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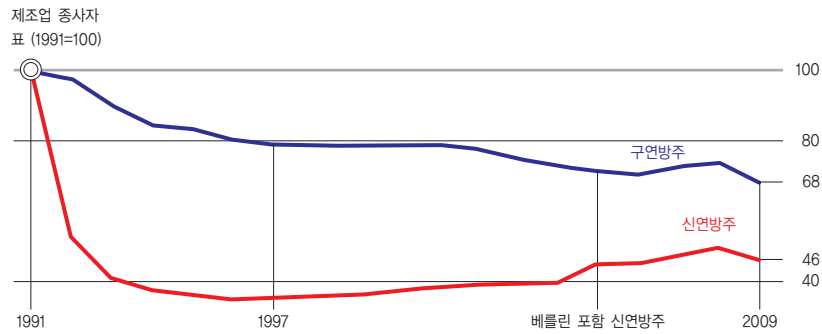
독일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상황은 다음 그래프 11에서 볼 수 있다. 그래프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제조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1991년과 비교해 급감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공식 이전지출 된 금액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통일 3년이 지난 1993년 총 이전지출액은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듯 1,700억 마르크/850억 유로(약 126조 원)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 통일 이후 20년 동안 통일로 인한 이득과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 소득에서 비용을 제하여만 할 것이다. 이 내용은 본 보고서 마지막 장의 주제로 통일의 이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총 ‘비용’을 계산할 때는 민간투자가 아닌 공공기관을 통해

¹⁵ 독일연방노동청(Bundesanstalt fr Arbeit)

그래프 11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표 2 동독으로 이전지출한 금액

10억 독일마르크

	1991	1992	1993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재정이전	111.6	124.4	128
*독일통일기금	35	36.4	35.2
*주정부 프로그램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12	12	N
*통일로 발생한 중앙정부 지출 (순지출 Gemeinschaftswerk 제외)	50.8	59.5	74.3
*연방정부 내 부가가치세 영수증 재분배	10.8	11.5	12.5
*연방정부의 이전지출	2	2.5	3
*통일로 발생한 서독의 재정적 손실	1	2.5	3
사회보험제도로 이전	20.5	31.8	42
*서독에서 동독 실업보험으로 이전	20.5	31.8	40
*서독에서 동독 연금보험으로 이전	N	N	2
총 이전지출액	132.1	156.2	171

출처: 독일경제연구소, 베를린

들어온 금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통일로 얻은 이득은 대부분 서독 GDP가 동독의 새로운 시장이라는 기회를 얻게 되어 눈에 띄게 상승했다는 것이고, 이는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독의 재건을 위한 그리고 동독을 절망에서 끌어올리기 위한 비용의 대부분은 공공기관과 사회보험기관을 통해서 투입되었다. 앞의 그래프 6의 독일의 재정헌법에 따른 독일의 재정균등화정책(FES)¹⁶을 통해 고안된 방식을 예로 참조하라. 따라서 단순화해보면 주정부든 당국이든 이러한 이전지출을 할 때 경제적 재정적 노력이 필요한지 추산해내기 위해서 독일 통일에서 동독으로의 공공 이전지출 내역을 계산할 수 있다. 한국이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투자에 사용된 지출이 통일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러한 지출은 경쟁력 있는 신규 자본을 형성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지출은 통일 ‘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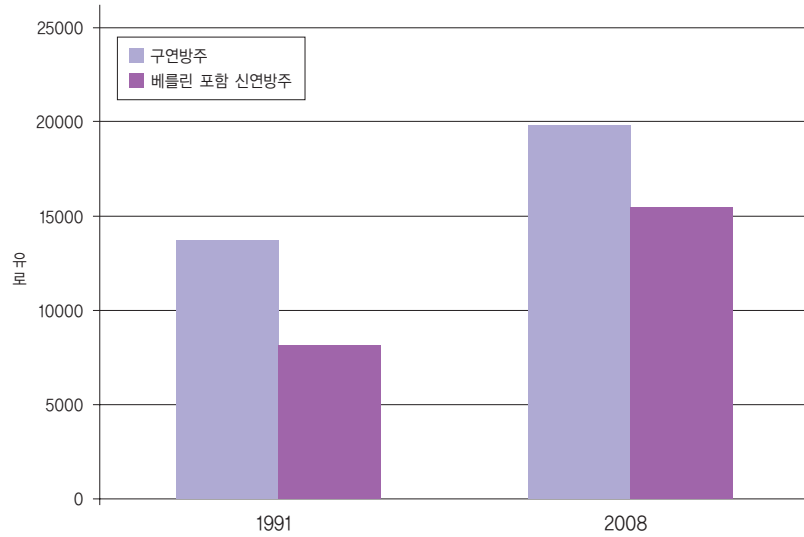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감질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 통일의 총비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지출로 책정한 독일 통일의 대략적인 총비용은 2010년 약 2.1조 유로(약 3,180조 원)였다. 이 비용은 2.4조 유로(약 3,640조 원)를 기록한 2009년 독일 GDP에 달하는 금액이다. 즉 독일인 한 명당 거의 30,000 유로(약 4천5백만 원)를 썼다는 의미이다. 1989년 말부터 동독의 1,660만 주민에게 2.1조 유로¹⁷(약 3,180조 원)를 나눠 준 것은 20년 동안 약 일인당 127,000 유로(약 1억9천만 원)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되었다는 뜻이다. 혹은 역으로 보았을 때 1989년 6,260만 서독인 개개인이 동독으로 약 35,000 유로(약 5천만 원)씩을 이전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분석적 이유로 통일된 지 20년 후 동독에 보조금으로 주는 비용이 통일 비용에 합산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보다는 지방발전 측면에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전을 했다고 계산해 “독일 통일의 비용”에 합산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1991년과 2008년 사이 동독과 서독의 민간 가구의 가처분소득의 불균형은 그래프 12를 참조하라.

¹⁶ German Financial Equalisation Scheme = Landerfinanzausgleich

¹⁷ 2.1조 유로 = 2조 1000억 유로 = 2,100,000,000,000 유로

그래프 12 | 민간 가구의 가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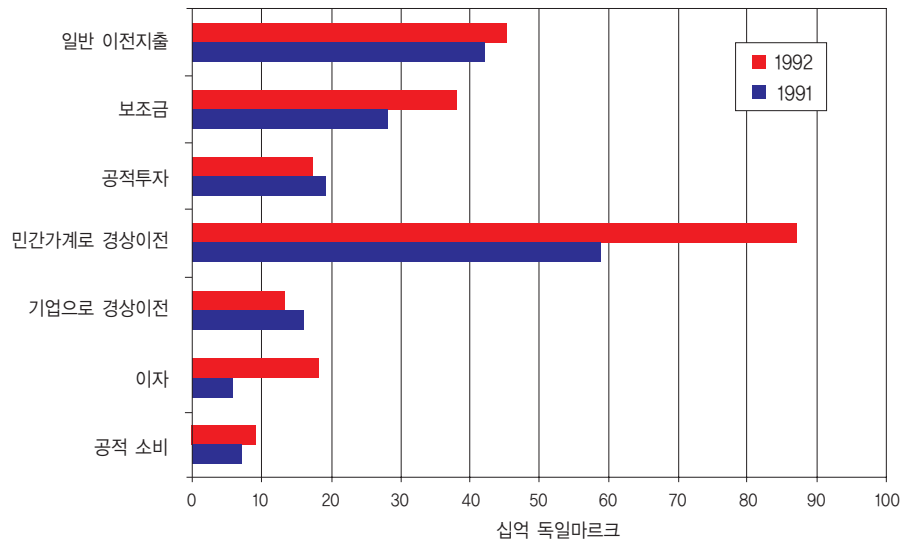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이 논의에 대한 답은 결국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 맥락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지역개발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해도 거의 차이가 없다. 궁극적으로 더 부유한 서독 주정부는 독일 재정헌법에 따라 지역별 불균형을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 더 가난한 동독주정부에 지원을 해야만 한다.

5. 모든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아래 표 3과 그래프 13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지출이 일어난 첫해의 상황을 상세히 보여준다. 독일의 방식대로 통일 과정을 조직하고 주도한다면, 1,600만 인구의 피폐된 경제를 재건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래프 13 동독으로의 항목별 공적 이전지출일반 이전지출



출처: 독일경제연구원, 베를린

아래 표3에서 경제개발의 관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동독 GDP 대비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순 이전지출 비율이다. GDP 대 이전지출 비율은 1991년 총 GDP의 53%에 달하는 총 1,422억 독일마르크/710억 유로(약 107조 원)에서 시작해 1992년 1,720억 독일마르크/860억 유로(약 128조 원)로 증가해 동독 GDP를 정확히 50% ‘사들일 수’ 있는 정도였다. 1992년부터의 이전지출은 1998년까지 6.4%가 증가했고, 서독이 이전지출을 통해 조달한 GDP비율은 동독의 총 GDP의 31.1%로 줄어들었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서독의 GDP에서 동독으로 옮긴 결과 GDP 비율은 연간 3.2%씩 하락했다. 이런 속도라면 서독에서 동독으로 모든 이전지출을 줄이는 데는 2000년부터 10년이 걸릴 것이고, 2010년에는 0%의 비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지출의 감소 비율의 감소폭을 보면서 더욱 명확히 알 수 있

표 3 | 신연방정부를 위한 이전지출

독일마르크(10억)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1-1998
지출									
연방 정부	74.7	89.4	114.9	114.9	135.8	139.1	131.5	132.7	933
주정부/지자체 서독	5	5.4	10.7	14.5	10.5	11.2	11.2	11.2	79.9
독일통일기금(보조금 없이)	31	24	15	5	0	0	0	0	75
사회보험(순)	18.7	34.2	23	29.8	33.3	30.9	34.7	31.9	236.5
유럽연합	4	5	5	6	7	7	7	7	48
신탁기관	8.8	13.7	23	23.8	0	0	0	0	69.3
총 지출	142.2	171.8	191.6	194	186.5	188.3	184.4	182.8	1441.6
보고:									
GDP대비 총 이전지출 비율	53	50	46.5	40.7	35.5	34.1	32.3	31.1	

출처: 독일경제연구소, 베를린

는 사실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동독 GDP로의 이전지출은 연간 1.5%만, 다시 말해 3년간 4.4%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지출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지출 비용을 20년 동안 지켜본 결과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전지출은 동, 서 간에만 이뤄지지 않고 남, 북 간으로도 이뤄지고 있으므로 2010년부터의 이전지출은 지역 간 개발 불균형을 위한 이전지출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보내는 이전지출이 높고, 독일재정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그렇게 지속될 것이다.

정확히 어떤 목적과 어떤 예산을 책정해 서독이 2.1조 유로를 지출했을까? 아래 표 4에서 동서독의 이전지출을 100으로 놓았을 때 어떤 분야로 예산배분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동서독 간 이전지출은 사회복지적 동기에 의한 것이었고, 여전히 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전지출의 31%가 예비비나 미할당이라는 불명확한 예산으로 할당되었다. 최악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지출의 80% 이상이 어떤 특정한 소비의 형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적 동기에 의한 지출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소비로 정의될 수 있고, 목적이 불분명하게 할당된 예산도 역시 소비되었을 수 있기

표 4 | 목적별 이전지출 총액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1-1998
사업기반 인프라 지출	12.3	9.9	8.6	10	13.1	13.1	13.1	12.8	11.6
경제 개발	2.5	4.8	7.6	7.5	8	6.9	6.3	6.6	6.4
사회복지 정책 위한 지출	45.4	54	54	53.8	49.4	50.3	50	49.3	50.9
예비비	28.1	22.4	20.1	19.5	23.8	24.3	24.9	25.6	23.4
미할당	11.7	9	9.6	9	5.7	5.4	5.7	5.8	7.6

출처: 독일경제연구소, 베를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를 일으키며 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은 어떤 비용이나 이전지출이 특히 “동독인”을 위한 것이고, 반드시 이전지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독일 재정헌법에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끝이 없다. 누군가는 통일 없이는 전혀 이전지출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은 오늘날의 한국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곤할 수 있는 것처럼 서독인들은 언제나 동독에 있는 더 가난한 지역을 위해 자신이 내는 상당한 세금을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어쨌든, 다음 표의 예산은 의심할 여지없이 동독인을 대상으로 한 이전지출로 볼 수 있고, 표 5에 언급된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동독지역에 직접 지출한 금액이 어느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으로의 총 이전지출에 대해 앞서 언급한 내용을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재건 보조금으로 인식할 수 있다.

표 5 | 동독지역의 특정 공공기관으로 총 이전지출한 금액 표

(단위 : 독일 마르크(10억))

1991-1998 정부 이전지출 총액			
인프라 개발		사회적 지출	
도로 건물 계획	29	주택 수당	7.2
대중교통	12.8	BAFÖG	3.2
연방 수로	3.8	아동 수당(매출 손실 포함)	36.5
철도 (자산)	60.1	양육 수당	6.2
동독 재건 투자 촉진	33.2	전쟁 희생자 복지/지원	9.6
문화 인프라 촉진	2.3	보조금 BA	87.3
도시건설	4.8	실업 수당, ABM	53.8
공공지원주택	6.2	조기퇴직 수당	39
대학 건물	5.1	사회 보험	113.7
동독 재활시설 보조금	2.5	기타	
연방 자산/건물	6	개인 필수 지출	5.5
SDAG Wismut	5.9	탄원	31.1
GA 경제-인프라	10.5	커뮤니티 서비스	2.8
GA 농업 인프라	2.3	연방 보조, 베를린	7.3
기업에 지불		정부 위치 베를린(50%)	2.5
GA 경제	12.9	기타	42
KfW-/ERP-프로그램(보조금)	8	보증	13.7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	6.7	지방 정부 할당	
신탁-승계 기관	3.1	“독일 통일 기금” 보조금	47.6
연구, 기술	15.7	연방 보조 할당	72.7
GA 농업	4.9	균등한 재정정책을 위한 새 규범	68.2
석유 보조금	1.6	총 연방 이전지출	920.3
주택대출 금리 보조	2.6		
철도 (Ifd. 보조금)	30.4		

출처: 독일 재무부

6. 1990-1995 독일연방정부의 재정 전략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독일이 새로운 국가부채를 통해서만 통일 비용을 조달한다면 독일이 통제 불가능한 부채를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1991년 초 이미 분명해졌다. 독일 GDP 대비 공공 부문 지출 비율의 중요성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더욱 더 커졌다. 공공 부문 지출 비율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약 5%씩 증가해 약 1,500억 독일마르크¹⁸를 기록했다. 이는 독일 공공 부문 지출 비율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수십억의 재원을 모두 조달해야만 했다. 독일 주정부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본 장에서 독일 주정부 산하기관이 항상 “재정적 부담은 일시적이고 곧 되갚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며 어떤 재원을 사용해 자금을 확충했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원칙적으로 이 엄청난 일에 필요한 수십억을 조달할 수 있는 3개의 재원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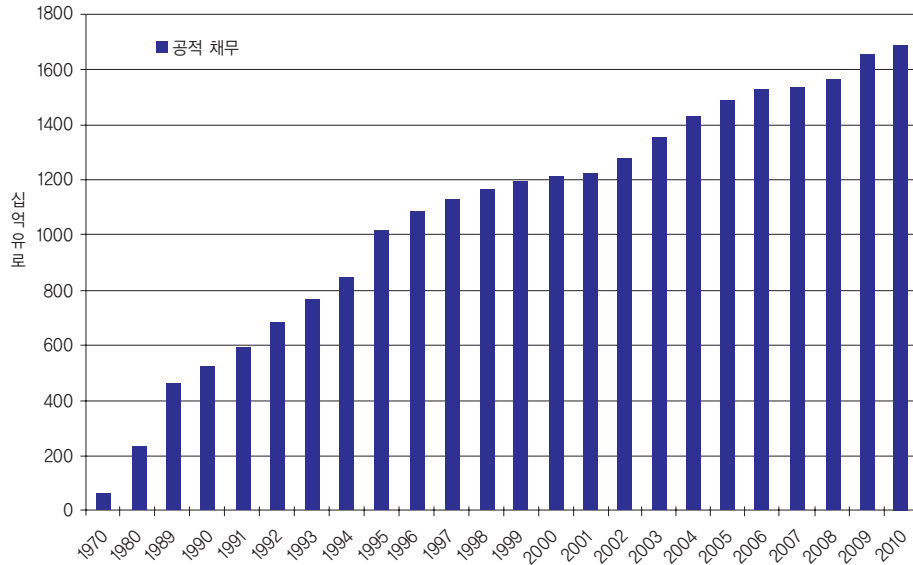
1. 국가 부채 확대
2. 더 인상된 혹은 새로운 세금, 수수료, 기부금 혹은 특별 기부금을 통한 수입 확대
3. 긴축재정, 예산 재편성 및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7. 독일 통일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한 국가 부채 확대

정부는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으로부터 1990년 10월 3일 통일 준비기간 동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1990년 12월 2일 첫 연방 독일정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약속을 했다.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고, 동독 경제는 더 활성화 될 것이고, 곧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모든 공공 당국, 기관, 단체의 공적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심지어 신규공적부채 방법까지 줄지어 개발되었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일 행정부

¹⁸ 유럽부흥개발기금(ERP), 독일통일기금, 부채청산기금(Kreditabwicklungsfonds), 독일신탁청(Treuhand Anstalt), 독일개발은행(KfW, 등)의 다양한 부채를 확대시키는 기관의 부채와는 상관없음.

그래프 14 | 1989-2010년 독일의 공적채무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산하기관의 순 공적채무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4년 동안 4,872억 독일마르크, 다시 말해 독일 GDP대비 20%가량 증가되었고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해왔다. 아래 그래프 14를 참조하라.

사유화 기관 ‘독일신탁청’과 국영은행, 개발은행, 공기업 등 다른 많은 공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위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93년 독일신탁청에서 받은 대출을 포함해 순 공적채무는 1,925억 독일마르크로 1993년 동독 GDP의 6%와 비슷한 수준이다.

독일 내 공적채무의 예상치 못한 증가의 결과로, 공적부채는 1989년 9,164억 독일마르크에서 1995년 2조 615억 독일마르크로 두 배 증가했고, 이는 아래 표 7과 그래프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 공적채무

채무자	시장 부채 증가함				연말 채무	
	1989	1990	1991	1992	1989	1992
지방행정기관	25.8	112.2	106.8	103	928.8	1346
총 예산						
연방 정부	15.4	51.6	30.2	20.3	490.5	611
주정부	7.3	19.2	24.1	34.7	309.9	387
지방정부	2.1	4.2	15.1	16.4	121.4	157
특별 예산						
ERP 특별 기금	1.1	2.4	6.9	8	7.1	24.5
‘독일 통일’ 기금		19.8	30.7	23.8		74.5
대출 기금		14.9	-0.2	-0.3		92
기타	15.7	29.8	67.5	86.6		
독일신탁관리청		4.3	19.9	30.5		107
독일연방철도	1.3	4.4	7.3	13.4	44.1	56.5
독일연방체신청	2.	4.8	10.3	15.4	66.2	96.5
연방진흥은행	12.4	16.3	30	27.3		

출처: 독일경제연구소, 베를린

따라서 독일 주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989년 40.7%에서 1995년 60%로 증가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존 공적채무뿐만 아니라 기관 스스로 부채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독일통일기금, 독일부채기금(the German Credit Fund)¹⁹, 사유화기관인 신탁청의 2차적인 공적채무도 포함되어 있다. 독일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독일 체신청(the German Post), 독일 철도(German Railway), 독일부흥기금(German Marshall Fund)의 후속 기금인 ERP 기금, 연방진흥은행 등의 2차 공공예산이 있다. 이 모든 기관의 부채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연방 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독일철도의 부채만도 1994년까지 700억 독일마르크에 달했다.

19 독일부채기금 = Kreditabwicklungsfonds sowie Erblastentilgungsfo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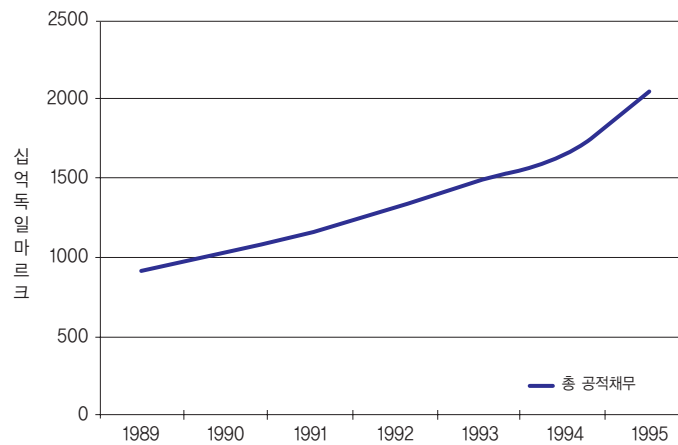
표 7 | 공적채무 전개상황

독일마르크(십억)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연방정부	490.5	542.2	586.4	606.7	670.5	738	805
주정부(서독)	307.6	326.4	344.6	364.7	389.5	414.5	443
주정부(동독)	.	.	3.6	19.3	35.5	56.5	59
지방정부(서독)	111.5	114.4	119.6	126.8	137	146	154
지방정부(동독)	.	.	7.6	12.2	24	34.5	46
ERP-특별자산	6.8	9.3	16.3	24.3	34	43	49.5
독일통일기금		19.8	50.5	74.4	88	92	90.5
부채처분기금	.	27.6	27.5	91.7	109	121	393.5
총 공적채무	916.4	1039.7	1156.1	1320.1	1487.5	1645.5	2040.5
신탁청	.	14	39	107	145	230	.
동독주택산업	.	39	42	47	52	52	21
총 부채(넓은 의미에서)	916.4	1092.7	1237.1	1474.1	1684.5	1927.5	2061.5

출처: 독일의회

그래프 15 | 독일 공적채무 전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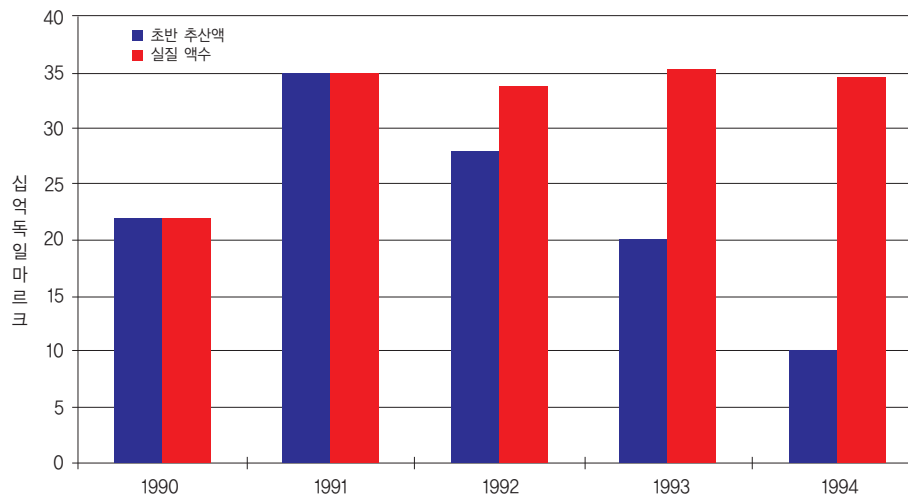


출처: 독일 의회

독일 통일에 뒤이어 신설된 3개의 2차적 예산은 신연방주의 예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채권이다. 독일통일기금의 적법성은 신연방주와 지방정부가 국내 및 국제 대출 시장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독일 재정 헌법에 따른 재분배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신연방주와 지방정부가 현금을 조달하기 위한 통합적 대출 방식을 갖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금의 총 자산인 1,600억 독일 마르크 중 950억 독일 마르크를 국제 대출시장에서 차입하였다. 원래의 추정치는 훨씬 낮았다는 것은 아래 그래프 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독일 통일기금은 아래 그래프 1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기금을 확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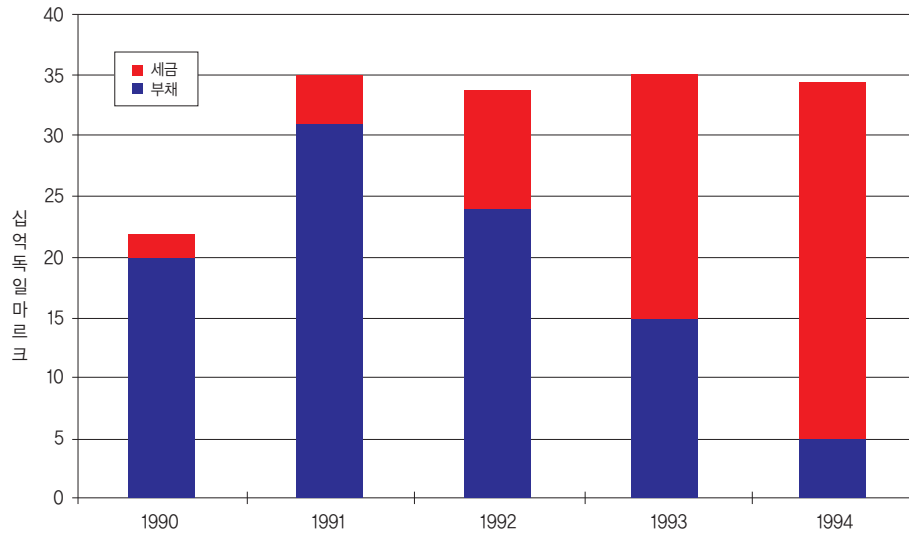
민영 기업의 미지불 부채는 사유화 기관인 독일신탁관리청이, 신연방주와 협동식 주택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1995년 연방정부와 모든 주정부가 떠안게 되었다(510억 독

그래프 16 | 1990-1994년 “독일 통일” 기금의 양적 변동상황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그래프 17 | 1990-1994년 “독일 통일” 기금 재정 지원 유형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일마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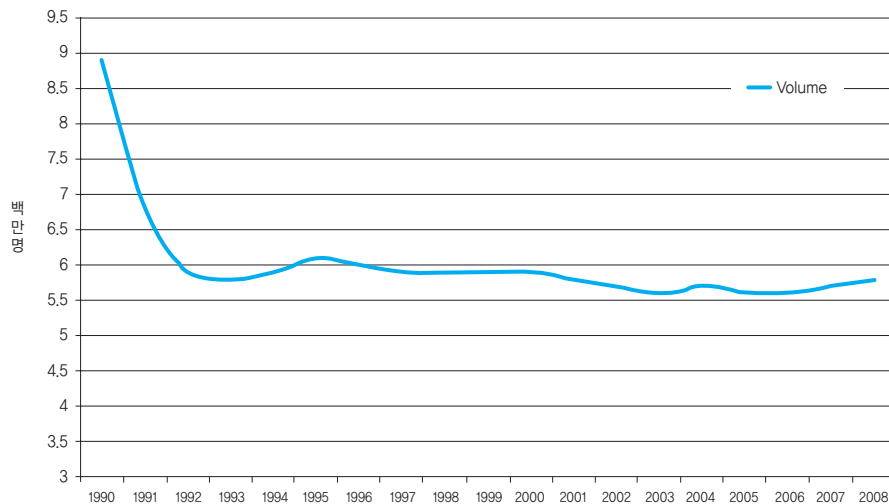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2차적 예산은 민영화 기관인 독일신탁관리청을 통해 생성되었다. 1994년 말 소위 “민중의 부동산” 기금이라고 불렸던 그 기금의 규모는 2,750억 독일마르크였다.

독일 통일 이후로 ERP 특별 기금과 연방정부의 부흥은행의 활동 폭은 상당히 확대되었다. 두 기관의 부채는 350억 독일마르크가 늘어났다.

8. 통일 재원을 위한 세금, 수수료, 사회보장분담금 및 기타 분담금 인상

독일 통일 비용에 관한 장에서 볼 수 있듯, 신규 대출만으로는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는 이전지출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독일 주정부의 총 부채는 통일 후 5년간 두 배로 증가했으며, 세금이나 수수료의 인상 없이 통일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1990년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다. 구동독지역으로의 경제적, 사회복지적 이전지출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통일 과정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일종의 투자로서의 대출로 충당한다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가 주

그래프 18 | 1990-2008년 신연방주의 노동인구백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국가통계전담반(Working Group National Account)²⁰

²⁰ Statistisches Bundesamt,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 der Lander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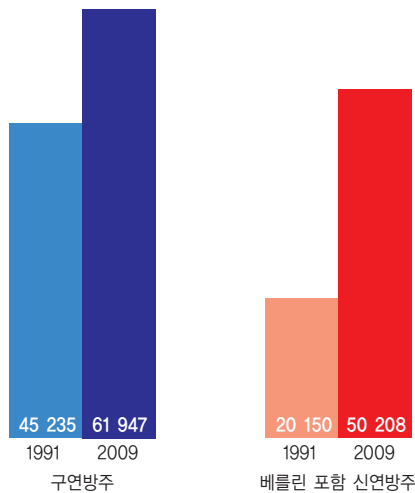
정부의 업무 할당은 줄이면서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예산 이전을 재편성하려는 노력으로도 충분하지 못했다. 1991년부터 독일정부는 점차 세금을 증가시켰으며 분담금은 급격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

세제부담을 늘림과 동시에 동독 주민에 대한 막대한 사회복지적 이전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의 분담금을 높여야만 했다. 1:1의 비율로 화폐통합을 한 이후, 실업률은 치솟았고, 임금 협상가들이 임금을 높이기로 한 이후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동독고용상황에 대한 내용은 위 그래프 18을 참고하라.

화폐비율의 결정만으로도 구동독의 임금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생산성 이상인 네 배나 치솟았다. 화폐통합 이후의 임금 및 월급 인상 결정은 동독의 이전 생산성 만큼으로나마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없애고 말았다. 이 내용은 위 그래프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절대적 수치의 생산성 불균형은 아래 그래프 19를 참조하라.

그래프 19 | 노동 생산성

근로자당 GDP(유로)



출처 : 독일 연방통계청

1990년, 1991년의 정치적 상황은 세금 인상을 하기에는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었다. 통일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 독일 의회는 독일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련의 세제법에 동의를 한 상태였다. 대규모의 3단계 세제개혁이 1990년 1월 1일 ‘세제개혁법 1990(the Tax Reform Law 1990)’의 이름으로 이미 법으로 통과된 상태였고, 이 법에 따라 납세자들의 소득세 세금부담만도 250억 독일마르크가 줄게 되었다. 세 번의 감세혜택은 총 500억 독일마르크의 세금을 낮춰주도록 고안되었다. 동시에 세제 개혁법이 신연방주에서도 실시되기까지 1991년 1월 1일까지의 시간이 걸렸다. 또한, 독일 의회는 동독 투자에 대한 막대한 감세와 우대정책을 약속했다. 1991년 6월 24일부터 실시된 세금법도 근로자들에게 감세와 세금공제혜택을 가져다주었다.²¹

게다가 독일 주정부는 사업소득세²²와 부동산 혹은 부유세²³도 면제해주었다. 정부는 사업소득세와 부유세의 면제로 생긴 세금결손액을 조달하기 위해 전 베를린분담금, 국경 지역 보조금 및 진흥 보조금을 중단시켰다.

1991년 연례 세금개혁법(Tax Reform Act)²⁴, 1991년 예산법(the Budget Law)²⁵ 그리고 소위 연대가산금법(Solidarity Law)²⁶으로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독일통일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약속은 넘쳐났다. 연방 및 주정부의 소득개선은 통일재원조달을 위한 대출과 부채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 재원으로 발전되었다. 1991년 예산법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는 공기업의 분담금을 올렸다. 예로, 공기업인 독일체신청²⁷ 수입의 연간 분담금을 10% 인상했다. 자세한 내용으로 아래 표를 참조하라.

소위 연대가산금법(Solidaritätsgesetz)이라 불리는 법은 소득세 및 법인세에 7.5%의 세금을 가산함으로써 독일 납세자가 세금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이다. 소득세 및 법인세에 7.5%를 가산한 것에 더해, 독일통일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연대가산금법에 따라 몇몇 세금인상이 진행되었다. 유류세, 천연가스세, 담배세 등의 세금인

21 1991년 6월 26일 Fordergebietsgesetz 그리고 1991년 6월 26일 투자법 (Investitionszulagengesetz)

22 Gewerbesteuer

23 Vermögenssteu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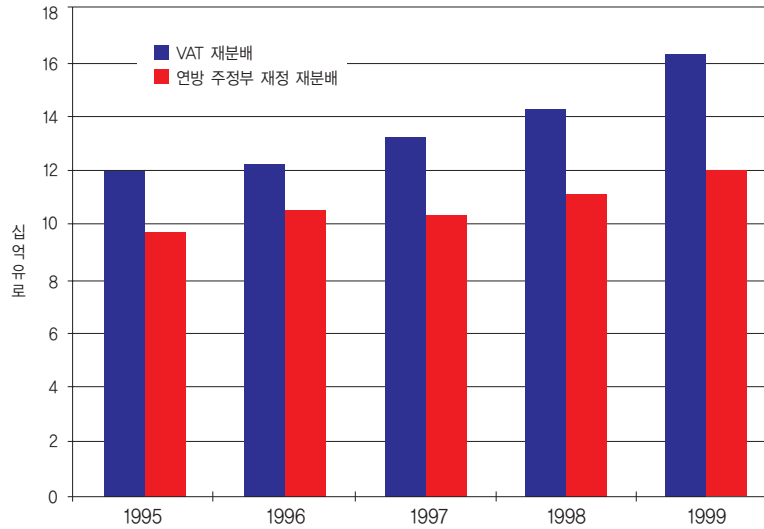
24 Steueränderungsgesetz 1991

25 Haushaltsgesetz 1991

26 Solidaritätsgesetz

27 Deutsche Bundespost

그래프 20 | 1995-1999년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재정 재분배



출처: 독일 재정부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 of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Finance)

상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세금인상으로 독일정부는 460억 독일마르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통일재원 조달을 위한 세금인상 후에는 부가가치세를 14%에서 15%로 올리는 조치를 단행했다.²⁸ 이런 조치로 얻은 세금 수입은 1993년 1,050억 독일마르크, 1994년 1,290억 독일마르크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위의 그래프 20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수익이 동독에 다시 재분배되었다.

독일 정부가 냉전(the Cold War)으로(냉전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정당화시키긴 했지만, 그 전체 금액은 독일통일기금으로 흘러들어갔고, 부채를 더욱 높이는 대출방식에 대한 압력을 낮췄다. 1993년 1월 1일 일반 부가가치세의 인상 이후, 자산으로

28 Steuerergänzungsgesetz 1992년 2월 25일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걷기 위한 신 세금정책이 개발, 실시되었다. 독일정부는 고정이자 적용세²⁹ 만들었다. 이 세제조치로 얻은 소득도 마찬가지로 독일 통일기금으로 유입되었다.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논의가 되어왔는데, 이 새로운 세금의 정당성은 이러한 논의에서 온 것이다.

독일의 주요 세금과 부담금을 바탕으로 하는 독일 주정부의 수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한 모든 조치 이후에는 독일 정부가 세금을 더 이상 올릴 수는 없었다. 반면, 독일 주정부는 통일 이후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약속받은 동독인들의 높아진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상 최대의 재원이 필요했다. 반면, 동독의 취업률은 1991년과 1992년 대폭 하락해 새롭게 개발된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막대한 이 전지출로만 동독인들의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반발도 없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고, 동독주민들이 그 지키지 못한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 그저 언젠가는 더 잘 살게 될 거라 믿었다는 것은 두렵기도한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 정부는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데 온 노력을 다하고 있었고, 신규 국가채무에 대한 금리는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었다.

새로운 세금혁신이 필요했고, 새로운 정당성도 필요했다. 1993년 6월 23일 독일 정부는 의회를 통해 다음의 새로운 세금 인상법을 통과할 수 있었다. 독일은 세금정책에 변화를 줄 때 회계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매해 1월 1일 실행하는데, 1994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작은 규모의 세제정책도 몇 가지 있었다. 1993년 6월 23일의 세금법은 소규모 세금 인상내용과 두 개의 핵심 정책이 포함된 십여 가지의 정책 묶음이었다. 첫째는 보험세 인상 결정이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30억 독일마르크의 세금³⁰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 독일 정부는 독일의회를 설득해 연대협약(Solidaritätspakt)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독일 정부는 연간 160억 독일마르크의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대가산금법Ⅱ를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실시해 이전에 연대가산금법을 실시할 때와는 달리 부담스러웠다. 독일 시민은 무기한으로 연대가산금

29 Zinsabschlagssteuergesetz 1992년 11월 9일

30 1993년 6월 23일부터의 연방정부재정 통합에 대한 세금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첨부1을 참고하라.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일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연대협약의 운영방식은 예전과 같다. 1995년 1월 1일부터 독일의 모든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 추가로 7.5%의 세금을 더 내야만 한다.

연방정부 이외에도, 독일 기초지자체³¹에서도 통일재원에 대한 부담을 지역세 인상과 지자체 수준에서의 수수료와 부담금 인상을 통해 조달했다. 이렇게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주요 원인은 각 지역사회는 독일통일기금의 일부인 주정부 할당액의 40%를 부담해야만 했고, 주정부에서 지자체로의 이전지출이 지속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자의적으로 세금항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해 법인세와 부동산세의 항목을 만들었고, 박물관, 수영장³², 상수도, 폐기물처리, 도서관 등 지역사회 시설 사용요금을 대폭 올렸다.

또한,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강제적 부담금을 전폭적으로, 하지만 점진적으로 증대시켰던 것은 동독 사회보장 시스템으로의 막대한 이전지출의 재원 조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었다. 1989년 독일 연방정부의 공무원의 자기의 소득의 23%를 국가연금제도 및 강제실업보험에 강제 부담금으로 내야만 했다. 1994년까지 이 강제적 추가부담금은 독일에서 얻은 모든 소득의 최고 25.7%까지 증가했다.³³ 1995년 사회보장 부담금은 26.1%로 증가했고, 1996년 하반기에는 모든 임금과 월급의 27.4%까지 올라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독일 통일 이후 7년 동안,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강제적 부담금은 통일 전과 비교해 1/5 수준이 인상되었다. 이렇게 막대하게 증가하는 부담금을 떠안은 건 주로 서독 주민이었고, 이 부담금³⁴은 연금을 받는 동독 주민과 점차 증가하는 동독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이전지출³⁵로 조달 사용되었다. 1990년 통일조약과 국가조약을 통해 동독으로 이전된 독일 연금시스템의 계산법 때문에 동독 주민은 이런 결정에 대해 아무런 위험 부담 없

31 Gemei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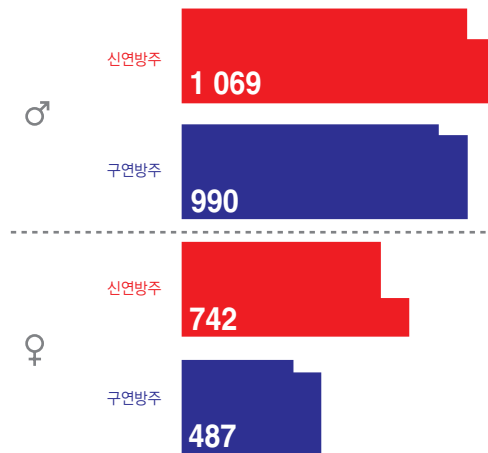
32 베를린 수영장 입장료가 올랐는데 아동은 1 독일마르크 성인은 2 독일마르크에서 아동은 2.5유로(5 독일마르크), 성인은 4유로(8독일마르크)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4배 이상 상승했다.

33 고소득층에게는 강제적 추가부담금이 사회보장부담금 최고액으로 한정되었다.

34 누구는 이러한 부담금을 세금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는데,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사회보장 시스템은 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받는다.

35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독일주정부 연금기금과 연방 실업청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약 1,350억 독일마르크를 이전지출했다.

그래프 21 | 연금 수준(2009년 12월 31일 월평균 연금 부담금)



출처 : 독일 연금 보험 데이터

이 즉각 서독주민의 연금수준만큼 연금을 올릴 수 있었다. 위 그래프 21을 참조하라.

9. 긴축정책, 예산 재편,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세금 인상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져 공공재를 살 수 있는 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는 정부가 부채를 많이 지녔다 하더라도 그 사회의 개개인은 이와 관계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예산을 긴축하고, 공공 서비스를 줄이고, 공공재를 민영화 하면 이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느껴지게 된다. 따라서 공공 서비스와 기능을 줄이는 것은 공적부채의 재원을 조달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³⁶ 동독의 붕괴 이후 공공재를 제공하던 기관을 구분하는 데에도 수 년이 걸렸다.

물론 통일 이후 공공 서비스에 수많은 작은 변화가 있었다. 재정적 관점에서 세 가지

주요 정책은 독일 주정부의 재정예산을 국가, 주정부, 지자체 수준에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1. 독일 주정부가 독점적으로 소유한 철도를 완전히 개편 (연방정부에게 연간 150억 독일마르크를 절약)
2. 망명신청자 유입 급증 이후 독일 망명법 변경: 망명신청자의 행정적, 시설, 인프라의 비용이 90년대 초 큰 폭으로 확대된 것에 대한 대응 (독일 지자체 수준에서 50억 독일마르크를 절약)
3. 간병인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많은 노령화 사회에서 신 사회보장시스템을 실시(모든 임금과 월급의 1.95%는 독일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유입되어 연간 400억 독일마르크의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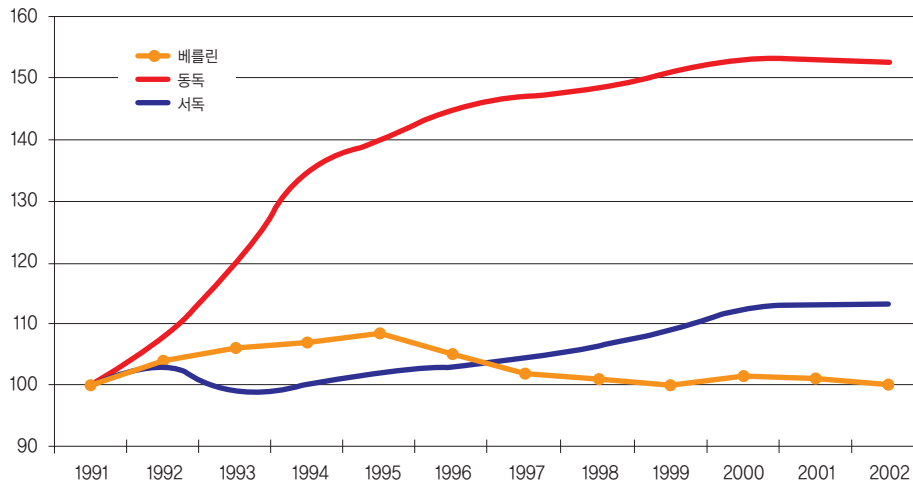
10. 독일 통일로 얻은 손실과 이익

독일 통일의 경제적 이익을 수치로 계산하고 추산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지표의 기준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이 시나리오는 비교분야에서 적어도 10년간의 경제 발전의 전개 상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언제나 반박될 수 있다. 독일경제연구소는 할레(Halle)에 있는 협력 파트너 중 한 곳인 IWH 경제연구소(IWH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가 개발한 시나리오를 선택했고, 이득이 손실보다 많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 계산에는 물론 경제지표로 추산할 수 없는 사실들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독일 통일에 어느 정도의 자본과 노력이 필요한지 그 사실이 분명해지고 난 후에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 처음에 나와 있는 그래프 1에서 볼 수 있듯, 동독 경제는 1:1 비율로 화폐가 통합되던 1990년 붕괴되었다. 그래프 22에서 볼 수 있듯, 동독의 GDP로 추산한 동독의 경제실적은 1991년부터 높

36 긴축재정을 실시한 나라는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 발트제국 뿐만 아니라 재정 위기를 겪었던 멕시코, 아르헨티나, 태국 등이 있다.

그래프 22 | 1991~2002년 베를린의 GDP 발전상황, 동독과 서독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아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서독을 의미하는 선은 1991년과 1992년 짧은 기간동안 호황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장기적 경제침체가 이어져 1992년 중반의 수준까지 이르는데 1996년 중반까지 시간이 걸렸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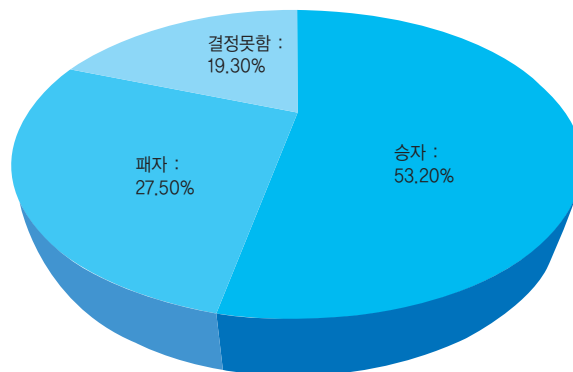
1:1 비율의 화폐통합 이후, 동독 주민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자신의 저축과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화폐통합 이후 2년간, 수백만의 동독시민은 서독주민에게는 당연한 승용차와 그 외에 TV, 비디오카메라, 세탁기 등의 제품들을 구매했다. 화폐통합 때문에, 동독 주민은 이런 제품을 새것이나 중고로 서독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 물론 서독 제품이 경쟁적 국제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품질이 더 좋았음은 물론이었다. 또한, 서독의 제품 공급력과 마케팅 기술도 동독인들이 서독의 제품을 선호하도록 일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인이 서독의 제품을 사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통일 후 동독의 대규모 소비는 서독의 생산 및 고용 상황을 확대시켰다. 동독에 고용된 사람은 1991년과 1992년 큰 폭으로 늘었다. 동독에서 온 이주민은 1990년에서 1992년까지 크게 늘었고, 이 내용은 위 그래프 4와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전혀 나쁜 소식은 아니다. 이 내용은 두 개의 개별경제가 서로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고, 법과 헌법을 근간으로 구성된 신생 독일연방공화국이 서독의 6,300만 인구와 동독의 1,700만 인구 대신 거의 8,000만의 통일된 인구를 가진 하나의 경제지역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통일의 정신적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치를 들며 계산할 필요가 없다. 로스톡 대학의 의료심리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Medical Psychology of Rostock University)는 통일 후 10년간 진행한 연구를 발표했다. 동독주민 대부분은 1990년 연방독일 시스템에 가입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자신들을 승자로 보았다. (아래 그래프 23)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한 후 얻었다고 생각되는 이득은 무엇이이었을까? 응답자는 여행할 수 있는 자유,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 재산획득, 지적 자유, 포괄적 자유, 자기개발의 가능성, 삶의 질 향상 등을 통일로 얻은 최고의 이득으로 보았다(다음 그래프 24, 25를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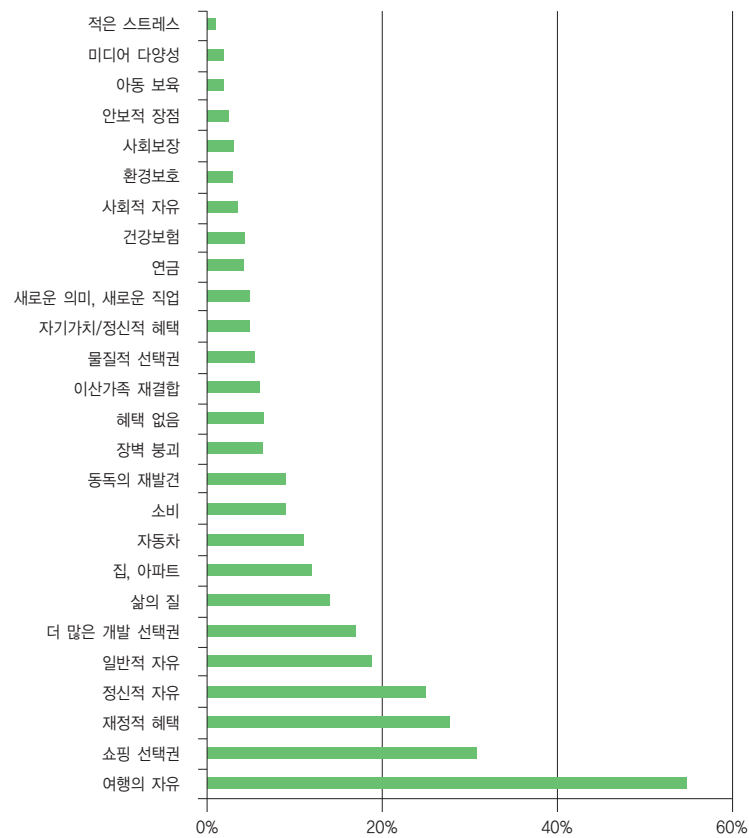
그래프 23



출처: 정신적 관점에서 독일통일의 손실과 이득(2000), (Costs and Gains of the German Unification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2000), Reis, Wiethoff, Meyer-Probst, Esser, Ih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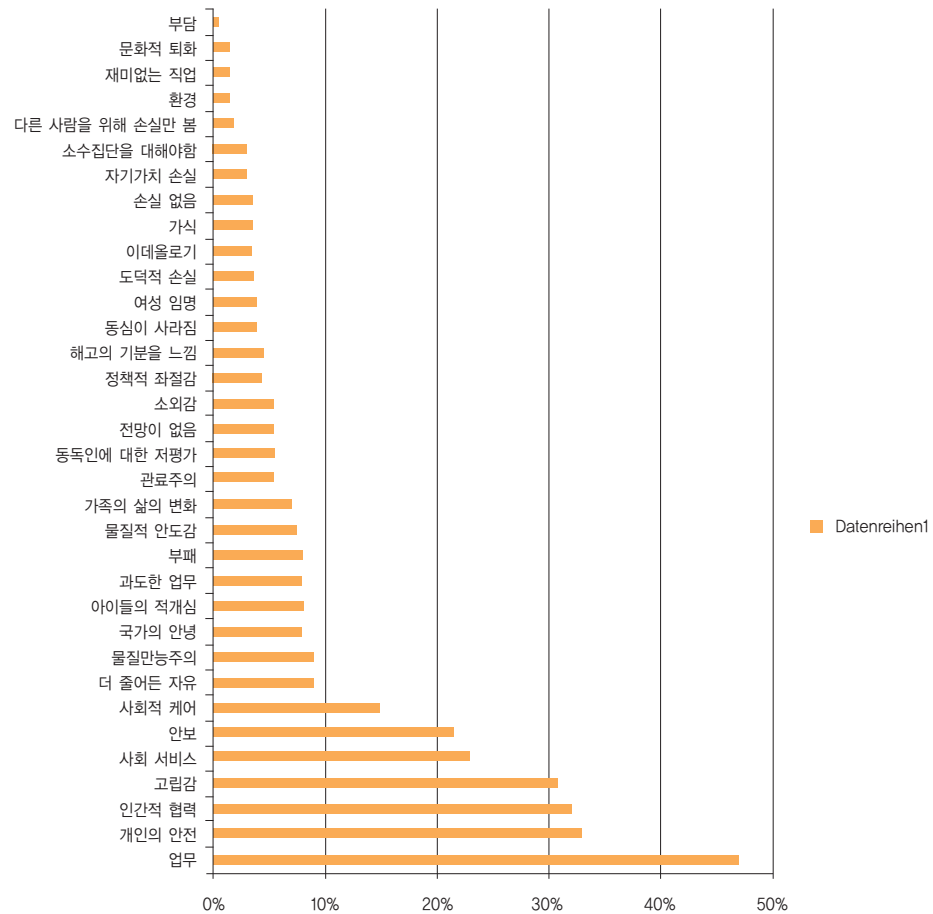
조하라). 직업, 개인의 보장, 사회적 행동, 고립감, 사회적 서비스, 안전(security) 등은 최고의 손실로 꼽혔다. 이러한 내용은 경제적 혹은 재정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프 24



출처: 정신적 관점에서 독일통일의 손실과 이득(2000).

그래프 25



출처: 정신적 관점에서 독일통일의 손실과 이득(2000)

11. 결론

현재까지 2조 1000억 유로, 40년간 사회주의 국가경제였던 동독을 개혁하고 재건하기 위해 서독이 지불, 이전한 대략적 비용이다. 이 엄청난 금액을 보면 동독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았고, 서독은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지출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공식적으로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균형잡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독은 최소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었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물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손실에 가까운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가를 묻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당시 누구도 독일 통일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 그대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습관의 동물이다. 다시 말해, 1989년 후반의 사건들과 1990년 중반 독일 연방 공화국의 법적 우산 아래 독일 통일이 결정되기까지 어느 누구도 정치적 절차가 이처럼 물 흐르듯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 예측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절차가 엉망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독일 내부에는 내전이나 대규모의 사회적 소요조차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를 돌아보면, 어느 누가 예측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값비싼 비용이 들었다 해도 서독과 동독 국민 모두 결과에 대해 불평할 수 없었다.

1990년 당시 독일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는 분명 세금과 부채를 늘리고, 공공부분의 지출을 재분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물론 중요한 일을 이루는 데는 사소한 문제들이 따르는 것처럼, 상당한 금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동독은 서독을 따라잡았고, 지금도 여전히 따라잡고 있다. 아래 표 8은 통일 이후 동독이 서독을 따라잡는 과정이 마침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소요될 시간을 추산해 둔 것이다.

경제성과지표를 서독 주민 일인당 GDP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조차도 2020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전부일 것이다. 독일 남쪽의 일부 지역은 북쪽 지역보다 경제적 성과 부문에서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아마 변함없을 것으로, 이는 지역 간의 경쟁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환영할만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 북쪽의 메클렌부르크

표 8 | 동등한 생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 및 기간

기준	목표달성을 위한 시기
경제성파지표 (일인당 GDP) 90% 이상	2020년 이후
근로임금표의 조화	2012년까지
효과적인 근로소득 90% 이상	2020년까지
사회복지 수준에서의 격차 해소	2012년까지
일인당 민간 가구 소득이 최소 90%	2020년까지
실업률이 구연방주 평균이상으로 30%가 넘지 않도록 함	2020년까지
소득세 비율이 최소 구연방주의 평균의 75%가 되도록 함	2020년까지
구연방주보다 빈곤율이 더 높지 않도록 함	2020년까지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 등의 동등한 시설	2020년 이후

출처: DIW 베를린 추산

크-포어폼머른주와 같은 지역을 포르쉐, 메르체데스, 아우디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생활수준으로 높이하고자 할 필요는 없다.

독일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점은 이를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해 추산해 봐야 한다. 이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독일이 통일로 얻은 이점이나 손실이 기준 시나리오보다는 크다는 논의가 있는 이후로, 이런 논의는 곧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독(DDR) 중앙 은행에 따르면, 동독의 중앙 통제식 경제는 1987년 이래로 부채에 허덕였거나 파산했다. 그 이듬해부터 1989년까지 동독은 대기업의 공산주의식 지배구조로 회계 장부상의 속임수를 통해 혹은 실질 부채 구조를 숨김으로써 경제를 지속시켰다. 북한도 상황이 이와 비슷할 수 있지만 2년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독일보다 비용이 덜 들 것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분단 국가가 향후 통일을 결정할 때 독일의 통일에서 교훈을 배울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로 견뎌왔던 국가의 성공적인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게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사실은 1990년 첫 선거부터 2009년까지 독일 정부의 권력

구조가 상당히 변화했다는 점이다. 소위 국민정당(Volkspartei)이라 불렸던 독일 기민련(CDU) 그리고 사민당(SPD)에서 좌파당 쪽으로 정치적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프 26 | 하원선거 결과



출처: 독일 의회

표 9 | 하원선거 결과(2차 투표 득점 결과)

(%)

	1990		2009	
	서독	동독	서독	동독
CDU/CSU	44.3	41.8	34.6	29.8
SPD	35.7	24.3	24.1	17.9
FDP	10.6	12.9	15.4	10.6
DIE LINKE(PDS)	0.3	11.1	8.3	28.5
GRÜNE	4.8	6.2	11.5	6.8
Sonstige(기타)	4.3	3.7	5.9	6.3

출처: 독일 의회

따라서, 통일 과정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국가는 인프라 재건과 사회보장제도에 이전 지출될 막대한 비용과 그 국가의 권력구조에 변화가 수반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분단된 한국이 통일을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모두는 통일과 재건의 과정이 적어도 한 세대는 걸릴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하나였던 한 국가는 언젠가 다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 약어색인

ABM	고용 창출 조치(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ABS	노동촉진, 고용 및 구조변화
AFG	노동촉진법
AG	주식회사
AktG	주식법
ALV	실업보험
Anm	각주(Anmerkung)
ATLAS	해당 연방주의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선별된 신탁관리회사
BA	연방고용청
BAföG	연방교육지원법
BAG	연방노동법원
BBT	튀링겐 보증은행 유한회사
BetrVG	경영조직법
BEZ	연방 보충이전금
BF	직업 향상교육
BGB	독일 민법전
BGBI	연방법령관보(Bundesgesetzblatt)
BHO	연방예산법
BIP	국내총생산
BMF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BMFT	독일 연방 연구기술부
BRD	독일연방공화국
BSP	국민총생산
BvS	연방 통일관련 특수과제청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DAG	독일 사무직 노동조합
DDR	독일민주공화국(구동독)(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IHT	독일상공회의
DM	독일마르크(Deutsche Mark)
DIW	독일 경제연구소
DtA	독일 변제은행
EAGFL	유럽 농업지도 보증기금
EFRE	유럽 지역발전기금
EG	유럽공동체

EGKS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EIB	유럽 투자은행
ERP	유럽 부흥 계획
ESVG	유럽 국민 계정 시스템
EVertr.	통일조약
EWS	유럽 화폐 시스템
EFRE	유럽 지역발전기금
ESF	유럽 사회기금
FAG	재정조정법
F&E	연구 및 개발
FKM	재정력 측정치
FKP	연방 재정 안정 프로그램
F&U	향상교육 및 전직교육
GA	공동과제
GBI	구동독 법령 관보(Gesetzblatt)
GD	이사회
GDP	국내총생산
GDR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GEMSU	독일 경제, 화폐, 사회 통합
GG	기본법
GRV	법적 연금보험
IAW	응용 경제 연구소
i.e.S.	좀 더 좁은 의미로
IFG	동독 구축을 위한 투자지원법
IfW	세계 경제연구소
IWF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w.S.	좀 더 넓은 의미로
KfW	재건금융공사
LFA	주정부 재정 조정 제도
IWH	할레 경제 문제 연구소
MBI	Management-Buy-In
Mio.	백만 단위
MKP	중산층 금융지원 프로그램
MOE-Länder	중부 및 동부유럽 국가

Mrd.	십억(Miliarde/Miliarden)
MBO	Mangagement-Buy-Out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PNV	공공 근거리 교통수단
RGW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Rat für Gegenseitige Wirtschaftshilfe, COMECON)
RKW	독일 경제 합리화 기구
SDAG	소련-독일 주식회사
SKWPG	저축, 안정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s.o.	상기 참조
SoBEZ	특별 수요를 위한 보충 양여금
THA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
TOU	기술 지향적 기업
u.Ä.	기타 이와 비슷한 것
v.H.	백분율
VGR	국민 계정

- 미하엘 브란트/베른트 레온하르트/페트라 레온하르트, 1994년. *신연방주에 대한 발전지원금*. - 5. 본: Economica.
Brandt, Michael, Hermann, Bernd und Leonhard, Petra. 1994. *Förderhilfen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5. Bonn: Economica.
- 올리히 부쉬(Busch, Ulrich), 2010년. 할레 경제연구소(발행). *독일 통일의 20년 - 변혁으로부터 유럽 통합에 이르기까지*. 회의자료집. 할레(잘레).
Busch, Ulrich. 2010.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Hrsg.). *20 Jahre Deutsche Einheit - Von der Transformation zur europäischen Integration*. Tagungsband. Halle /Saale.
- 울리 디트리히, 마리온 폰 하겐(발행인), 1991년. *정책 교육에 관한 기고문*. 베르기쉬-글라트바흐.
Dieterich, Uli und von Hagen, Marion (Hrsg.). 1991. *Beiträge zur politischen Bildung*. Bergisch-Gladbach.
- 하이너 플라스벡과 구스타프 A. 호른 공저, 독일 통일 -한국을 위한 모델? 올더쉴: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Flassbeck, Heiner und Horn, Gustav A. 1996. *German Unification - an Example for Korea?*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 게르하르트 헤스케(Heske, Gerhard), 2005년.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동독 내에서의 국내총생산, 소비 및 구직활동*. 쾰른: 역사적 사회연구 센터.
Heske, Gerhard. 2005. *Bruttoinlandsprodukt, Verbrauch und Erwerbstätigkeit in Ostdeutschland 1970-2000*. Köln: Zentrum für Historische Sozialforschung.
-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및 다니엘 호프만, 1998년.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독일 통일 및 독일 정치에 관한 문서*: 독일 연방 내무부. 베를린.
Hofmann, Daniel und Küsters, Hanns Jürgen. 1998.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utsche Einheit 1989/90: Bundesministerium des Inneren*. Berlin.
- 경기변동 연구소, 2006년. *경제 연구 분기보고서*. 69 회차. 베를린: 동커 운트 훔블로트.
Institut für Konjunkturforschung. 2006. *Vierteljahre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69. Jahrgang. Berlin: Duncker und Humblot.
- 클라우스 카이스베르크, 1996년. *독일 통일을 배경으로 살펴 본 동독 조정 과정의 어려움과 전망 및 원인과 결과 - 경험적 분석 및 이론적 분석*. 본: Economica.

Keysberg, Klaus, 1996. *Ursachen, Auswirkungen und Perspektiven des schwierigen wirtschaftlichen Anpassungsprozesses in Ostdeutschland vor dem Hintergrund der Wiedervereinigung – Eine empirische und theoretische Analyse*, Bonn: Economica.

- 할레 경제연구소(발행), 2010년. 독일 통일 20년 – 변혁으로부터 유럽 통합에 이르기까지. 회의 자료집. 할레/잘레.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Hrsg.), 2010. *20 Jahre Deutsche Einheit – Von der Transformation zur europäischen Integration*, Tagungsband, Halle/Saale.
- 요아힘 라크니츠, “통일의 비용은 얼마인가? 동독에 대한 이전 지출금 지급의 평가”. 브뤼머호프, 디터 출판사. 2000년. *통일의 유용성과 비용*. 바덴-바덴, Nomos.
Ragnitz, Joachim, “Was kostet die Einheit? Zur Bewertung der Transferleistungen für Ostdeutschland”, In: Brümmerhoff, Dieter (Hrsg.), 2000. *Nutzen und Kosten der Wiedervereinigung*, Baden – Baden: Nomos.
- 요아힘 라크니츠(발행인), 2001년. 독일 통일의 10년. 득실와 전망. 회의자료집. 특별호 2, 할레/잘레.
Ragnitz, Joachim (Hrsg.), 2001.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en*, Tagungsband, Sonderheft 2, Halle/Saale.
- 테오 바이겔/만프레드 쉘, 1994년. 독일과 세계가 변혁을 맞이한 날. 장벽 붕괴로부터 카프카스 산맥까지. 뮌헨: 퍼런시 바이 브룩만.
Schell, Manfred und Waigel, Theo, 1994. *Tage, die Deutschland und die Welt veränderten. Vom Mauerfall zum Kaukasus*, München: Ferency bei Bruckmann.
- 게를린데 진, 한스-베르너 진, 1992년. 독일 통일에 관한 국민경제 관점에서의 견해. 뮌헨: Dt. 타셴부흐 출판사.
Sinn, Gerlinde und Sinn, Hans-Werner, 1992. *Kaltstart, Volkswirtschaftliche Aspekte der deutschen Vereinigung*, München: Dt. Taschenbuch Verlag.

제 **2** 부

자료 목록(해제)

■ 자료 1~19 478

자료 1

통일의 경제적 비용

담당자/기관 :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동독, 신탁관리청

내용

1. 도입

- 통일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거나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서독에서 동독으로 흘러간 공적 자금의 규모는 1993년 기준 1천7백억 마르크에 달했다.
- 서독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및 국고 세입이 증가했는데, 이는 분단과 관련된 지출 비용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 러시아 서부 집단군(Westgruppe der sowjetischen Truppe) 철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통일 독일의 국방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산출된다.
- 동독에 대한 투자비용을 통일 비용에 포함시켜 정산해서는 안된다.

2.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

2.1 자본 수요에 관한 초기 견적

- 초기에는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필요 자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 동독의 경우 국고 수입은 높은 반면, 국고 지출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2 동독에 대한 서독 공적 자금 지급

- 1993년에만 1천7백억 마르크의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10억 마르크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매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원되며, 저금리 융자도 제공된다. 동독에 대한 이러한 이전 지출금은 자본시장 및 세수로 감당하도록 한다.
- 이전 지출금을 서독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분단과 관련된 지출 비용이 해소되었고, 동독에서의 경제 수요는 서독 경제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3 각 분야에 따른 자원 분배

- 이전 지출금은 대부분 사회적 영역과 교통 체계 정비에 사용된다.

자료 1

- 서독의 각 주정부에서 분담해야 할 기여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3.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

- 통일 이후 그림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이는 독일 통일 기금(Fonds Deutsche Einheit), 채무 청산 기금(Kreditabwicklungsfonds) 및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으로부터 충당된다.
- 독일 통일 기금은 새로운 재정 배분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데 사용된다.
- 채무 청산 기금에서는 동독의 부채 및 채무를 인수했다.
- 가장 중요한 그림자 예산은 신탁관리청이 담당하며, 신탁관리청의 최종 대차대조표는(1994년 말 기준) 최소 2천 7백 50억DM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 통일 이후에는 유럽 부흥 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특별 기금 및 개발 촉진 은행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동독 및 서독 국영 철도는 1994년 초 합병되었지만, 예산은 각각 별도로 관리된다.

4. 동독 자본재

- 1989년 동독은 8천억 동독 마르크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물가수준: 1985년). 이는 서독 마르크로 약 3천 1백 90억 마르크에 해당하게 된다(물가수준: 1990년).
- 경제·화폐 및 사회통합(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으로 인해 수많은 공장이 폐쇄되었고, 제조 산업에서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하지만 고무적인 의견으로는 동독의 자본재가 1천 5백억 마르크에 달하는 동독 투자로 인해 향후 6년 내에 두 배로 증가하게 되고, 아울러 3백 5십만 개의 일자리 가운데 절반 가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출처 : 하이너 플라스벡과 구스타프 A. 호른 공저(Flassbeck, Heiner und Horn, Gustav A.), 1996년. German Unification – an Example for Korea?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p. 189–200

자료 2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에 관한 개요와 이러한 이전 지출이 경제 발전과 각 주정부 재정 및 지역자치단체 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담당자/기관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지자체

내용

독일 통일이 이룩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서독에서 동독으로 막대한 규모의 이전 지출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의 ‘생활 여건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심지어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에 대한 저항이 생겨나고 있다.

독일 통일 기금, 제 1차 및 제 2차 연대협약

- 독일 통일 기금(1990년 - 1994년) 이후 후속적으로 제 1차 연대협약(1995년 - 2004년) 및 제 2차 연대협약(2005년부터 현재까지)이 마련되었다.
- 독일 통일 기금을 통해 신연방주 정부는 822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40%의 자금이 구동독지역 지자체를 지원하는데 지급되었다.
- 그 후 제 1차 연대협약에 따라 945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동독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자금은 환경 폐기물 처리, 산업지구 조성 및 거주용 주택 건설 등의 출처로 사용되었다.
-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동독은 제 2차 연대협약을 통해 1,560억 유로 가량의 지원금을 추가로 획득하게 된다.
- 2005년부터 동독의 신연방주는 매년 이에 대한 발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 주정부 재정 조정 제도

- 1995년 초부터 동독은 서독과의 재정 격차를 더 이상 좁히지 못했다.
-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정부 재정의 수평적 재분배는 그 80% 가량이 동독에

자료 2

해당되었다.

- 아울러 연방정부의 수직적 재분배라 할 수 있는 특별 수요를 위한 보충 양여금 (Sonderbedarfs-Ergänzungszuweisung)을 통해서도 동독의 재정력은 강화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강화된 재정력이 적절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동독의 조세 여건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 복지 정책적 관점에서 야기된 이전 지출

- 사회보험공단 역시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에 기여하고 있다. 모든 신연방주를 비롯하여 브레멘과 쉐레스비히-홀스타인 역시 아직까지 일방적으로 지원만 받고 있는 상태이다.
- 수령 금액 정산에서는 거주지 위치가 아닌 작업장의 위치가 고려된다.

전망

- 서독으로부터의 이전 지출이 없다면, 동독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도 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 동서독 통합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통합에는 보통 10년에서 최대 80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만약 서독으로부터의 이전 지출이 중단된다면, 동독 주민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이 거주지를 떠나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로도 17% 가량의 동독 주민이 동독을 이탈하고 있다.
- 이러한 이전 지출을 통해서도 동독으로부터의 공급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독에서의 수요가 강화되는 측면이 강하며, 이러한 수요는 비단 동독 제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 제 2차 연대협약은 2019년을 기점으로 그 시효가 소멸된다.
- 무엇보다 기술 혁신 분야와 수출 관련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현명하다.

출처

토마스 렌크 및 마르티나 쿤체 공저(Lenk, Thomas und Kunze, Martina), 2010년. 할레 경제연구소(발행). 독일 통일의 20년 - 변혁으로부터 유럽 통합에 이르기까지. 회의자료집. 할레(잘레): IWH-특별호, p. 401-416

자료 3

이전 지출의 성과 - 구동독지역 재건 지원과 발전 제약

담당자/기관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내용

동서독 간의 이전 지출 - 통합의 현상

- 중부 유럽 및 동부 유럽의 경우 자본, 전문지식 및 인력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 동독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자금 이전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다.
- 중부 유럽 및 동부 유럽의 경우와 달리 동독의 경우는 서독의 수준에 상응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 헌법에 의거하여 동독은 자금 이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곧 서독에 대한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 동독 국민 경제의 총자원사용량은 생산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

재건 보조금으로서의 이전 지출금 지급

- 오직 자금 이전 규모를 점차적으로 축소해 가는 방안 만이 진정한 ‘성장 지향적 업무 과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는 2005년에는 4.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6년 이전만 해도 거의 14.6% 수준에 달했다).
- 1990년대에는 특히 건설 부문에 있어 오히려 생산력 과잉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 하지만 동독 주민 1인에 대한 투자 비율은 대부분의 경우 서독 주민에 대한 투자 비율 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 자금 이전은 동독 내의 수요와 생산에 도움이 되었고, 2005년도 기준으로 사회 보장급 부의 72%를 차지하게 되었다.

자료 3

- 동독 내의 수요에 대비해 볼 때 서독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에 달했지만, 정작 동독의 자체 생산품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에 불과했다.

문제 해결의 단초

- 동독은 단순히 자금 이전의 대상이 되는 지역 또는 오로지 서독으로부터 수입만 하는 지역으로 머무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판매 시장이자 수출 대상 지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 동독은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생산기지로서 더 많은 장점을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동독에서는 개인 투자의 비중이 빈약하다.
- 이전 지출과 산출 격차 혹은 총자원사용량은, 과잉과 무역수지 불균형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축소되어야 한다.

출처

울리히 부쉬(Busch, Ulrich), 2010년. 할레 경제연구소(발행). 독일 통일의 20년 - 변혁으로부터 유럽 통합에 이르기까지. 회의자료집. 할레(잘레): IWH-특별호. p. 381-395

자료 4

동독의 국내총생산(GDP), 소비 및 직업활동

1970-2000

담당자/기관

게르하르트 헤스케(Gerhard Heske)

내용

도표: GDP 사용, 백만 유로 단위, 95

도표: GDP 사용, 1970 = 100

도표: GDP 사용, 1989 = 100

도표: GDP 사용, 국내 사용에 대한 % 비율

출처

게르하르트 헤스케(Heske, Gerhard), 2005년.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동독 내에서의 국내총생산, 소비 및 구직활동. 쾰른: 역사적 사회연구 센터. p. 259

자료 5

공공 재정의 재정 수요와 공공 부채

담당자/기관

울리 디트리히, 마리온 폰 하겐

내용

본 문서의 작성자인 울리 디트리히와 마리온 폰 하겐은 동독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요약본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통일과 연계된 비용이나 문제는 원래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증대되었고, 경과 과정 역시 원래의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동독의 경제 발전에 대한 오판으로 말미암아 이전 지출금 지급은 예상보다 그 액수가 훨씬 커졌으며,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필요 예산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인프라 구조에 대한 투자가 점점 더 늦춰지고 있는 형국이다.

신연방주에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표에 입각해서 독일 연방정부에서는 ‘동독지역 재건 공동사업(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을 통과시켰다. 본 사업 안에 따라 1991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방 차원에서는 120억 마르크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여 매년 인프라 확충 비용의 명목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 밖에도 추가적으로 본 사업안은 일자리 창출 조치 및 개인의 기업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재원은 연대법에 근거한 세수 확대를 통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1991년에는 180억 마르크, 그리고 1992년에는 280억 마르크의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인상 조치가 실행되게 된다.

독일 통일 비용 마련과 관련된 특별예산 편성에는 다음과 같은 기금들이 참여하게 된다(하기 지급 금액 단위는 십억 마르크 기준):

자료 5

1. '독일 통일' 특별기금: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채무 수용 950억 마르크
2. 채무 청산 기금
 - 동독의 국내 채무 총액, 278억 마르크
 - 주택 건립 용자는 제외(이 가운데 최대 210억 마르크의 금액을 1991년까지 반환해야 함)
 - 화폐통합기금의 조정 채권으로 인한 채무 350억 마르크
 - 이는 은행 차변자산 및 대변자산에 대한 환율이 서로 상이함으로 인한 것임
 - 동독 신탁관리청의 신용 허가 한도 250억 마르크
 - 구동독 국책은행의 지급불능 경우에 대한 연방의 책무 300억 마르크 이하
 - (베를린 국책은행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약 300억 마르크에 달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이 가운데 240억 마르크가 지불 루블화 형태임.
 - 또한 채권 가운데 일부는 개도국 채권으로 구성됨.
 - 상기 두 가지 경우 모두 가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는 별개로 1991년 약 27억 마르크 규모의 차환 비용이 요구됨.)
 - 동독 해외 채무 비용채무 상환을 위해 기금으로부터 직접 빌린 채무
3. 동독의 해외 채무, 160억 마르크
 - 외국에 대한 동독 은행 채무로 입증됨
4. 300억 마르크 수준에 달하는 신탁관리청의 시의회 관련 채무(현황: 1990년 말),
 - 최소 300억-최대 900억 마르크
 - 조사에 따르면 1993년 말까지 신탁관리청의 채무 증가는 900억 마르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5. 동독 의료보험 채무(운영자금 대출) 120억 마르크
6. 동독 국가보험공단 상환액(인수 주체인 알리안츠 보험회사에서
 - 인계 받지 않은 대변자산) 60억 마르크
7. 재산권상의 청구와 관련된 보상기금(여기서는 과거 소유재산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함)
8. 1994년까지의 소련군 주재비용 및 철수비용에 대한 기여금 120억 마르크

자료 5

9. 주택 건립 용자: 채무 금액의 수준 350억 - 550억 마르크
- 이는 독일 신용은행에 대하여 신연방주와 주택건설협회 및 각 지자체가 지고 있는 채무를 뜻함.
10. 독일 신용은행에 대하여 동독의 인민 소유 기업이 진 채무 880억 마르크
11. 독일 신용은행에 대하여 농업생산조합이 진 채무 70억 마르크

출처

울리 디트리히, 마리온 폰 하겐(발행인), 1991년, 정책 교육에 관한 기고문, p. 86-94

자료 6

독일 통일에 관한 국민경제 관점

담당자/기관

게를린데 진, 한스-베르너 진

내용

1989년 기준으로 서독에서의 개인 순고정자산의 총합은 5조 8,500억 마르크 수준에 달했다. 이는 총 인구수를 6,230만 명으로 산정했을 때 일인당 자본금액이 93,900마르크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에서도 서독에 준하는 수준의 자본 집중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인구수 1,640만명을 기준으로 1989년 당시의 제반 조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금액이 1억 5,400만 마르크에 달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개인 저축이 개인 투자나 국가 예산적자 및 자본수출에 있어 재정의 큰 축을 담당하는 핵심이었고, 그 액수만 해도 기록적인 수치였다. 하지만 통일이 이룩되자 이러한 개인 저축액은 개인 투자나 특히 급격하게 상승한 국가 예산적자를 메꾸는 재원으로 고스란히 소진됨으로써 자본수출을 위한 재원이 더 이상 남아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자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순자본유입, 즉 자본수입을 감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독일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대외 순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1990년 당시만 해도 이 금액은 약 5천억 마르크에 달했는데, 이는 동독에서 필요한 개인 자본금액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따라서 동독 경제를 다시 재건하고, 사회복지 체계의 재구성 과정을 견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 정책을 통해 독일이 보유한 대외자본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었다.

동독 경제를 개혁하고 재구축하기 위한 잠재적 자본 수요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자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결국 외환 시장에서는 독일 마르크화에

자료 6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물리게 되었다. 그 결과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출처

게를린데 진, 한스-베르너 진 공저, 1992년, 독일 통일에 관한 국민경제 관점에서의 견해, p. 44-51

자료 7

제 2차 발전 보고서: 구동독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경제연구소 보고

2003년 11월

담당자/기관

독일 경제연구소(DIW Berlin) / 키일 대학교 부속 세계 경제연구소(IfW)/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경제 문제 연구소(IWH)/유럽 경제연구센터(ZEW)

내용

2.2. 동서독 간의 1인당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비교 연구

본 보고서에서는 동독의 인구발전 상황에 관한 분석이 실려 있다. 공공 예산 분야에 있어서의 전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구발전 상황에 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인구발전 상황이 단순히 지역적 경제성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단순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지자체 간의 재정 균형을 조율하기 위한 재정 수요에 있어서나, 각 주정부 재정 조정 제도에 근거를 둔 재정 지원금 수입 및 연방에 의한 재정의 수직적 재분배 문제 등은 모두 거주 주민 수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다. 아울러 지출 측면에 있어서도 인구발전 상황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독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민의 수가 약 130만 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되어 총 6,300만 명의 인구를 확보하게 되었다. 반면 동독 지역에서는 1,420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주민 수가 1,370만 명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동독의 총 수입 및 지출 증가율은 부분적으로 주민 1인당 수입 지출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매년 58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주민 1인당 약 415유로의 금액이 특별수요를 위한 보충양여금의 명목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동독 전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2002년도부터는 동독 구축을 위한 투자지원법에 의거하여 약 23억 유로에 달

자료 7

하는 재정 지원금이 해당 목적을 위한 지출 자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중한 지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서독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재정 적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재정 적자는 명백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동서독 간의 격차 또한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이미 1998년도만 해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이 서독 지역의 경우 4,043 유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동독 지역에서는 주민 1인당 채무액이 4,525 유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독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도 1999년 서독 기준 주민 1인당 채무액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출처

연방 재무부 의뢰로 실시된 연구용역

자료 8

독일 통일 - 이전 지출의 문제

담당자/기관

하이너 플라스벡

내용

동서독이 통일을 이룩한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지원되었던 이전 지출의 규모가 과거 상당 수준의 금액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재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 경제에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전 지출의 규모를 가능한 축소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도 이제부터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건전화를 위해서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 및 이와 연계된 연방 정부 지원 금액의 국가 할당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이전 지출의 삭감이 지금까지 노력해 온 모든 상황을 역행 시킬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간과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문건에서는 독일 통일 이전의 상황과 세계 1차 대전 직후 독일이 처했던 상황이 서로 비교되고 있다. 세계 1차 대전의 종결 직후 전승을 거둔 연합국들은 베르사이유 조약을 통해 독일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연합국 측에 지불하도록 결의했다(이 또한 이전 지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전 지출에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는 논리를 찾는 것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와 베르틸 올린(Bertil Ohlin) 사이에 있었던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다. 케인스의 논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쟁 배상금 지불 의무를 지고 있는 독일의 국제수지 흑자 규모가 이를 감당할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요지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일이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크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자료 8

이러한 상황이 바로 독일 통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반복되었다. 이는 동독 경제가 서독 마르크화 체제로 이전해 가면서 급격한 경쟁력 손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서독 기업들이 동독 시장을 완전히 점령해 버릴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서독의 경우 오늘날 까지도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국내총생산 규모와 비교했을 때), 아울러 고용률과 소득 또한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서독 대외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는 방식을 통해 이전 지출의 규모 또한 삭감해야 한다면, 이는 결국 서독 경제발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 생산, 고용 및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많은 단점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듯이 결국 이전 지출, 자본 수출 및 직접 투자 등은 전적으로 돈이 있는 편에서 먼저 선취적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는 자본 수출이 성립하려면 우선 국제수지 흑자가 선행 조건으로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DIW 베를린

자료 9

화폐 전환 이후 독일에서의 화폐

담당자/기관

라인하르트 폴

내용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서독과 계획경제가 주도하는 동독의 화폐가 서로 통합된 것은 유례가 드문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화폐 전환이 최적의 양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상황을 마련하는 준비는 대단히 어려웠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 합의한 화폐 전환 비율은 안정성, 경쟁력, 예산 및 사회정책을 고려한 모든 요구사항이 일치점을 찾아 일종의 합의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구(舊) 부채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처리규정이거나 동독 고정자산에 대한 주민의 배분비율이 불충분한 수준이었던 점 등은 미처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었다.

이와 반대로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 절하 및 자본시장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감 등은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폐 통합 및 정치 통합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들을 극복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화폐 관련 변수와 실질적 변수 사이에 성립된 관계가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은 잠재적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화폐량 정책의 적용을 어렵게 했고, 특히 적절한 화폐량 책정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난관으로 작용했다. 유수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진행한 화폐량 책정에 관한 리서치를 통해 연방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해 놓은 화폐량 목표는 그 운신의 폭을 너무 좁게 설정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설정된 목표 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화폐량의 변동 양상은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료 9

비록 1991년 및 1992년의 기간 동안에는 서독에서 현격한 속도로 물가인상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는 팽창적인 화폐 정책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방은행이 이러한 진행 상황을 전담하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및 1992년 기간 동안 나타난 서독의 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비용 상승을 급격하게 불러오게 되었고, 아울러 물가 인상의 압박 역시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결국은 소득의 규모 자체가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과 경기침체의 가능성 또한 더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연방은행에서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경제 상황에 너무 늦게 대응했으며, 충분히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다.

출처

독일 연방은행, DIW 베를린

자료 10

재정 정책상의 조치 및 통합 과정 - 독일 통일 5년에 대한 회고

담당자/기관

디터 베스퍼

내용

독일 연방정부에서 내세운 독일 통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에 있어 엄청난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서독 사회적 격차를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부담비용을 줄이고, 공공 행정의 구축 및 전환, 인프라 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동독 구(舊) 부채의 인수문제 및 산업경제 활성화 지원 등과 같은 도전적인 요구 조건은 오직 제한적으로만 수용될 수 있었다. 특히 초기 몇 년 동안 이와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근시안적 경향과 일단 무조건 행동에 옮기는 행위주의적인 특성으로 귀결 지을 수 있는데, 이는 동독의 경제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탓이기도 했다. 더구나 연방정부에서는 세금 인상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늦추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손실 만을 입히고 말았다. 이로 인해 재정 분배 정책 또한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연방 재정안정프로그램이 수립되었고, 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연방주는 재정헌법의 테두리에 포함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되고, 아울러 국가채무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재정 정책과 관련된 행동 반경은 자연히 극도로 제한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였지만(예를 들어 최저 생계비에 대한 세금 면제조치 등), 그다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출처 : DIW 베를린

자료 11

독일 통일의 재원 마련

담당자/기관

클라우스 카이스베르크

내용

본 문서는 동독에 대한 이전 지출의 규모 분석과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공공 예산의 재정적 변천에 대한 분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도표 17 및 도표 19는 ‘독일 통일 기금’의 재정 상태와 채무 청산 기금의 재정 변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도표 20은 상기 언급된 통일 기간 동안 새롭게 편입된 신연방주의 공적 급부의 변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 도표 21은 국가 활동 백서에서의 국민 계정과 재정 통계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정산 양식은 다양한 관점의 견지에서 볼 때 서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분석 설명의 목적, 탐구 영역, 산정 시스템, 국가 내부적인 이전 지출 조치, 회계 시점, 투자 및 일반적으로 세금에 준하는 공과금의 제한, 연방은행 소득 및 부양 급부의 수령 등).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는 서로 다른 상기 두 가지 정산 양식 사이에서 동독에 대한 이전 지출금 지급의 적정 규모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도표 23에서는 신규 공공 채무의 수준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신규 채무 증가는 결국 총부채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출처

클라우스 카이스베르크, 1996년. 독일 통일을 배경으로 살펴 본 동독 조정 과정의 어려움과 전망 및 원인과 결과 - 경험적 분석 및 이론적 분석. 본: *Economica*, S. V-XII.

자료 12

신연방주에 대한 발전지원 - 목차

담당자/기관

미하엘 브란트/베른트 레온하르트/페트라 레온하르트

내용

신연방주 전체 지역에 대해서는 총 122가지 종류의 발전 기금이 제공된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대다수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발전기금, 연방 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 발전기금.

출처

미하엘 브란트/베른트 레온하르트/페트라 레온하르트, 1994년. 신연방주에 대한 발전지원금. -5. , 개정판 확대본, 본: Economica, S. V-XII.

자료 13

통일의 비용은 얼마인가? 구동독지역에 대한 이전 지출 성과에 대한 평가

담당자/기관

요아힘 라크니츠

내용

- 신연방주에 대한 이전 지출금 지급의 대부분은 연방 차원에서 담당한다(도표 2-1).
-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연방 차원의 총 이전 지출금 지급은(도표 2-3) 연방정부의 지출 가운데 극히 일부 만이 신연방주에 대한 ‘특별 급부’로 고려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이전 지출금 지급에는 특히 동독 재건 투자지원법(IFG Aufbau-Ost)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투자 지원, 동독 입원 요양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금, 산업경제 지원금, 철도 건설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독 신연방주에서도 호불호가 확실한 지원 분야가 존재했는데, 특히 도로 건설(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 %), 철도 건설(39 %), 도시 건설(86 %), 산업경제 지원(90 %) 및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투자 프로그램(91 %) 분야를 특히 선호했다.

출처

요아힘 라크니츠, ‘통일의 비용은 얼마인가? 동독에 대한 이전 지출금 지급의 평가’. 브뤼머호프, 디터 출판사. 2000년. 통일의 유용성과 비용. 바덴-바덴, Nomos. p.15-27.

자료 14

10개항 프로그램

담당자/기관

틸로 자라친

틸로 자라친의 평가 및 내용

1990년 1월 12일 동독 재무부 및 재무부 산하 연구기관 해당 담당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서독 연방 재무부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화폐, 재정 및 세제 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 내용이 동독 방문단에게 전달되었다. 동독 지역에서는 이러한 세금 관리라든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요 세무법 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동독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서독과 같은 세금 체제로 올바르게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수많은 직원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고, 시장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적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특히 시급한 사안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지속적 개혁 과정에 대한 연관성 있는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방 재무부에서는 이러한 개혁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화폐통합 문제 또한 함께 다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서독 화폐통합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10가지 항목의 단계적인 화폐통합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1. 가격 및 시장 개혁
2. 재정 및 세금 개혁
3. 대외 무역교류 자유화 및 국가의 독점적 무역활동 폐지
4. 외환의 인위적 제한 폐지 및 화폐 태환성 확보
5. 현실적인 환율 규정의 도입
6. 화폐 및 은행 시스템의 개혁
7. 화폐 공급의 엄격한 관리

자료 14

8. 자본 형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 마련
9. 동독 시장에서의 환율 안정화
10. 화폐통합

출처

테오 바이젤/만프레드 쉘, 1994년. 독일과 세계가 변혁을 맞이한 날. 장벽 붕괴로부터 카프카스 산맥까지, p. 174-183

자료 15

구동독지역에서 국가 경제 및 기업적 차원에서의 적응단계 진행(요약집)

담당자/기관 : 독일 경제연구소, 세계 경제연구소, 할레 경제 문제 연구소(IWH)

내용

독일 연방 경제기술부 주관으로 200년 9월 6일 경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본 학술회의의 논점은 동독의 변환과정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항목을 선택하여, 이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것이었다. 독일 및 외국에서 모인 경제학자들은 신연방주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앞으로도 동독이 지속적으로 체제 전환하는데 필요한 경제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 할레 경제 문제 연구소(IWH)에서는 본 행사의 결과물인 회의록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본 회의록을 통해 행사에서 소개된 선별된 발표문과 토론 기고문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 공공 재정: 동독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가 극히 저조한 수준이었지만, 반면 1인당 지출은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재정적 불균형은 주 간 재정 조정 제도 및 연방에서 지원되는 보충 이전금을 통해 해소될 수 있었다.
- 인프라 구조: 신연방주의 열악한 인프라 기반시설은 특히 교통 및 통신망 구축에 있어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90년대를 거쳐 오면서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었다.
- 노동시장: 신연방주의 실업률은 구연방주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임금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국민소득: 90년대 동독의 생활수준은 물질적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는 서독으로부터의 이전 지출금 지급 덕분이었다.

출처 : 할레 경제연구소(IWH), 2001년. 독일 통일의 10년. 득실와 전망. 회의자료집. 특별호 2, p. 24-33

자료 16

재정 정책과 통일 - 10년의 결산

담당자/기관

슈테판 바흐 및 디터 베스퍼

내용

독일 통일로 말미암아 독일의 재정 정책은 커다란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인프라 기반시설 및 민간경제 자본금의 현대화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생산 및 고용 분야에 있어서의 붕괴현상을 사회 복지적 정책을 통해 그 충격을 해소해야 했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독일 연방정부는 물론 서독의 각 주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동독 신연방주 정부들을 통상적인 각 주정부 간 재정의 수평적 평준화 시스템에 통합하는 과정은 전반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한 것은 중대한 실수였다. 이로 인해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으며, 아울러 재정 정책상의 행동 반경 또한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 제도적 방향 설정: 연방 차원에서 진행된 재정 안정 프로그램은 중기적 관점에서 동독 지역 공공 예산의 재정 마련을 위한 견고한 밑바탕이 되었다.
- 이전 지출금 지급: 이전 지출은 90년대 중반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는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로 접어들게 되었다.
- 신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변화 상황:
 - 1994년까지 차입금 및 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었고,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견조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및 각 지자체 간의 재정적 균형
- 인프라 자본

자료 16

- 각 주정부 간 재정 조정 제도: 구연방주의 경우 단순히 재정 부담을 떠맡는 역할로만 국한되지 않고, 통일을 통한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재정적 평등화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청구권은 누가 어느 정도 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닌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 조세 정책: 특별 감가상각, 투자 보조금, 이자 및 자본 수익에 대한 새로운 과세 규정, 재산세 폐지 등
- 국가 부채: 공공 예산에 대한 운용 반경이 제한된 것은 통일이 가져온 부담감이라 할 수 있다.

출처

경제 연구 분기보고서, 69회차. H. 2. p. 194-224

자료 17

공동 경제-화폐 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사항

담당자/기관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및 다니엘 호프만, 1998년.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독일 통일 및 독일 정치에 관한 문서: 독일 연방 내무부. p. 782

내용

공동 경제-화폐 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사항

동독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나 또는 개인 자본이 동독에 흘러들고,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면, 동독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구조변화가 필요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독일 연방정부에서는 동독 정부를 상대로 제안사항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독일 마르크화가 법적 지불수단으로 인정되어 동독 마르크화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독의 사회 시장경제를 동독에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방안이었다(중앙 연방 차원에서 경제 질서를 위한 법적 동화과정).

출처

주무 연방부처: 독일 연방 재정부

자료 18

지역 간 협력의 지원/보조를 위한 양독 간 공동위의 설립과 업무지침에 관한 협의

담당자/기관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및 다니엘 호프만, 1998.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독일 통일 및 독일 정치에 관한 문서: 독일 연방 내무부. p. 901 – 902

내용

지역 간 협력의 지원/보조를 위한 양독 간 공동위원회의 설립과 업무지침에 관한 합의.

각 주정부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 입각하여 공동 정부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되, 본 위원회는 2개의 대표단으로 구성하고,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 회동하는 것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발전 시키기 위함이다: 베를린, 뤼베크 부흐트, 엘버레기온, 하르크, 서부 튀링엔/헤센 베르크 란드, 중부 튀링엔/프랑켄 등. 본 사업의 주요 핵심영역은 지역발전, 환경 및 자연보호, 교통 시스템과 방송 시스템, 노동문제 및 사회문제, 그리고 관광 등이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각 주정부를 상대로 권고사항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협정 초안을 마련토록 한다.

출처

주무 연방부처: 서독 재무부(관할)와 동독 재무부.

자료 19

구동독의 경제 상황에 관하여

담당자/기관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및 다니엘 호프만, 1998년.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독일 통일 및 독일 정치에 관한 문서: 독일 연방 내무부, p. 1458 - 1461

내용

동독의 경제 상황에 관하여

1989년 전기와 대비해 볼 때 1990년 상반기에는 산업 생산성이 약 7%정도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는 동독의 노동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추세가 늘고, 생산된 제품의 판로 또한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데서 기인한 현상이다. 1990년 7월 기준으로 볼 때 실업자 수는 242,000명에 달했고(3% 비율), 파악된 임시 노동자 숫자는 656,000명을 기록했다. 구조적 전환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조치는 다른 아닌 서독의 조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는 서독의 조세 제도가 성과 및 성장 지향적이었기 때문이다(이를 도입하게 되면 동독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순조세 금액이 1천억 마르크 이상 감소되는 효과가 달성된다). 서독 연방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동독의 구조전환 과정을 보조했다(예를 들어 지역 투자 용자제공, 자기자본 조성 지원책 등). 아울러 서독 기업들 또한 동독 기업과의 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상반기 기준 약 2800개의 조인트 벤처). 그동안 동독 기업의 사유화 과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신탁관리청”). 아울러 유럽연합과 동독 사이의 상품교역은 완전히 자유화되었다(1990년 8월 1일부터 농산물 및 관세 통합). 하지만 1990년 하반기 때 동독 국가예산은 350억 마르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출처

주무 연방부처: 독일 연방 경제기술부12. Bibliography